

농어촌 고용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김 병 룰 연 구 위 원
전 익 수 부 연 구 위 원
윤 중 열 연 구 원
민 자 혜 위 축 연 구 원
박 미 성 연 구 원
김 말 징 초 청 연 구 원
김 배 성 연 구 위 원
김 정 섭 부 연 구 위 원
한 재 환 부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병 룰	연구위원
전 익 수	부연구위원
윤 종 열	연구원
박 미 성	연구원
김 말 징	초청연구원
김 배 성	연구위원
김 정 섭	부연구위원
한 재 환	부연구위원
민 자 혜	위촉연구원

연구 총괄, 제4장 집필
간사, 제1장, 5장, 부록 집필
제2장 농식품산업현황 정리
제3장 분석
제3장 분석
제3장 분석
제2장 농어촌지역 고용현황 정리
제2장 식품산업현황 정리
연구보조

머 리 말

우리 농업은 인력수요의 계절성 문제,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비선호 및 유입 부족 문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문제 등으로 인력 수급이 불안정하여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농업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불일치가 지속, 심화될 경우에는 고용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농촌인력의 안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인 산업부문의 고용구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농업 또는 농촌인력의 고용 및 노동력 수급 현황이나 실태조사, 노동력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농축산업부문의 정밀한 고용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통계의 심층분석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전화·우편설문)를 실시하고, 고용인력 부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문제점을 발굴하여 농식품 및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응해주셨던 지역 오피니언 리더, 농업인, 농촌인근 인력회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업분야 고용문제 및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0.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본 연구는 우리의 농업인력 수급실태에 대한 보다 엄밀한 현황분석을 위해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농업인, 농촌인근 인력회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조사에 응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하면,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83.3%에 달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농업인 조사에서는 고용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중이 7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상시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11%에 그친 반면, 일일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근 인력회사 조사에서는 농촌지역 인력회사 인부들의 농작업에 대한 비선호도가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작업의 어려움(41.9%)과 저임금(17.4%)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인력회사를 통한 인부들은 주로 건설작업 현장으로 투입되고, 농업분야는 50~60대 고령층이, 그리고 과거 농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축산업 고용인력에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농축산업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작업, 축사관리 등 농작업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 잔업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력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다. 시설원예, 버섯재배 공장 등 상시고용에는 합법 외국인근로자가 주류이며, 고랭지채소, 양념채소 파종 및 수확기 등에는 지역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도 상근인력으로 이용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2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부족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높여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근무태도 불량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10년도 행안부 주관의 희망근로사업으로 농촌지역 농업인력 공급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인근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대부분 기존의 농촌인력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희망근로사업으로 유출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력 수급안정화를 위한 방향은 농업인력 수급의 현안 문제인 인력수요의 계절성 문제,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비선호 및 유입 부족 문제, 다른 산업분야 대비 상대적 저임금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세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농업(특히, 경종작물)은 지역별 생산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도 지역별 농작업 시기가 달라 전국의 가용한 농업인력을 DB화하고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계절성을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인력은행 및 인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지역별 시기별 고용인력 현황 및 전망을 나타내는 농업인력관측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농어촌인력은행 및 인력공급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분야 고용의 저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농업은 산업적 특성상 임금을 제조업분야처럼 인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 고용에 대한 임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효율성임금을 통한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분야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실정에 대하여, 기존 이론(고용이력모형)에서 시사하는대로 농업분야 노동경험기회를 확대해 향후 취농 유인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인턴제,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농촌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분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 임금인상 등 경영비 압박 및 근무태만·이탈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정이므로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쿼터량을 확대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류기간연장, 4대보험지원 등의 복지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농업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불일치가 지속 또는 심화될 경우에는 고용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농촌인력의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 필요하다.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Agriculture Employment and Future Labor Policy in Korean Agriculture

Labor shortage has been a critical problem in Korean agriculture. Korean agriculture is experiencing hardship in right-time-farming due to imbalanc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To obtain a more accurate picture of the current agricultural employment situation, this study analyzed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Questionnaire and telephone surveys were conducted on local opinion leaders, farmers and recruit agencies, and on-the-spot investigations were made when necessary. A survey of opinion leaders showed that the ratio of respondents who said they are experiencing hardship due to labor shortage is 83.3%, a testament to the seriousness of the labor shortage problem. A survey of farmers, meanwhile, showed that the ratio of farmers who said they needed to hire workers stands at 73%, but only 11% said they use full-time workers whereas 63% said they use part-time workers on a daily basis. According to a survey of local recruit agencies, the degree of non-preference for farm jobs amongst workers was high at 80.4% due to job difficulty (41.9%) and low wage (17.4%). Those workers who are hired through local recruit agencies are mostly assigned to construction jobs, while the majority of hired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old workers in their 50s and 60s with past experience in farming.

In agr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the dependence on foreign labor is deepening. Since there is practically no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in agriculture and animal farming as in facility agriculture and barn management, foreign workers are preferred over Korean workers who are reluctant to extra work. Foreign workers constitute the majority of full-time jobs in horticulture and mushroom cultivation. For sowing and harvesting of uphill and spice vegetables, illegal foreign workers are frequently employed. The number of woman immigrants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and employed as full-time workers is on the rise. The most pressing issue with regard to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severe shortage of

workers (29.6%) despite the surge in demand. The labor shortage problem increases management cost by raising the wage-negotiating power of foreign workers and induces moral hazard such as bad work attitude.

It was revealed that the Hope and Work Project administered this year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caused a severe problem in the labor market in rural regions. As most project participants who have been sources of agricultural labor flow away to the employment project because it is relatively easier to work in the project than in agriculture related jobs, the labor shortage in farming regions is aggravated.

The direction for stable supply of labor in agriculture should be set to address the pending issues of the agricultural job market (that is, seasonality of labor demand, short supply of labor due to non-preference of agricultural jobs by new entrants to the industry, and low wag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and detailed measures need to be prepared to solve the problems.

The types of agricultural crops cultivated (especially of seed sowing) differ by region, and even if the cultivated crop is the same, the period of agricultural work varies from region to region. So in order to address the seasonality of a farming operation, the available manpower across the country should be put into a database, and a labor supply system should be built to address the seasonality of a farming operation. The efficiency of the labor supply system should also be elevated by carrying out labor market forecasting projects that show manpower data for different periods and regions across the country.

There are some difficult aspects to deal with in regard to the low wage in agricultu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hat can support the wage and enhance the security of employment through efficient wages.

In order to address the shortage of new job entrants to the agricultural sector, it is necessary to induce job seekers by expanding job experience opportunities as implicated in the existing employment model.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following measures: introduction of youth intern programs, designation of agricultural firms as defense industry enterprises, utilization of public service conscripts for agriculture, and expansion of community service orders in support of agriculture.

In addition, despite the rising dependence on foreign labor, the available labor is far lacking and this increases management hardship due to

rising wage and moral hazard such as work negligence and running awa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quota on foreign workers and activate the human network for immigrant women.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welfare assistance, such as educational support, extension of stay, and the four national insurances, to provide a stable work environment.

If the labor imbalance in the agricultural sector continues or deteriorates, then the employment issue will be a grave hindrance to the future of Korean agricul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stabilization of the agricultural labor market is a pressing issue.

Researchers: Byeong-Ryul Kim(Ph.D.), Ik-su Jun(Ph.D.), Jong-Yeol Yoon, Ja-Hye Min, Mi-seong Park, Mal-jing Kim, Bae-seong Kim(Ph.D.), Jeong-seop Kim(Ph.D.), Jae-hwan Han(Ph.D)

E-mail: brk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3
- 3. 연구범위와 방법 4

제2장 농식품분야 및 농어촌지역 고용현황

- 1. 농식품산업 부문 고용현황과 특징 6
- 2. 농어촌지역 고용현황과 특징 18

제3장 농업인력 수급실태 조사·분석

- 1. 조사방법 및 내용 27
- 2. 농업인력 수급실태 28
- 3. 실태조사에 나타난 지역별 농업부문 노동시장 주요특징 45

제4장 농업인력정책 기본방향 및 세부 방안

- 1. 농업인력정책의 기본방향 48
- 2. 세부 추진방안 51

제5장 요약 및 결론

- 1. 요약 64
- 2. 결론 66

<부 록> 농업인력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68

- 1. 이론적 접근 필요성 68

2. 고용 및 실업이론 동향	69
3. 신케인즈학과 이론들의 농업인력정책 시사점	70
4. 농업경영주의 외국인 근로자 선호 이론	71
5.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이론	72
6. 농어촌 공동체회사 이론	73
조사표	75
참고 문헌	92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농식품부문 취업자 수 및 종사자 수	7
표 2- 2.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11
표 2- 3.	농림어업 부문별 고용자 수	12
표 2- 4.	식품산업의 규모(2007년)	13
표 2- 5.	식품제조업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2006년)	14
표 2- 6.	식품제조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14
표 2- 7.	식품제조업의 부문별 고용 비중	15
표 2- 8.	식품유통업 종사자 규모별 비중(2005년)	16
표 2- 9.	외식업 부문별 고용 비중	17
표 2-10.	외식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2005년)	17
표 2-11.	한국과 OECD의 도소매·음식숙박업 비교	18
표 2-12.	농어촌지역 고용 변화	19
표 2-13.	농촌지역에서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산업분야 (2000~2008년)	20
표 2-14.	취업자 수가 현저히 증가 또는 감소한 농촌지역 (2000~2008년)	21
표 2-15.	사회 서비스분야 농어촌지역 고용 현황(2000~2008년)	21
표 2-16.	시기별·지역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22
표 2-17.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어촌관광 주요 특징 비교	24
표 2-18.	농림수산물식품 산업 부문별 업종 현황	24

제3장

표 3- 1.	농촌지역 농작업 인력공급원 비중	29
---------	-------------------------	----

표 3- 2.	농작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기영농 어려움 경험	30
표 3- 3.	고용 노동력의 필요성	30
표 3- 4.	상시고용 인력이용 여부	30
표 3- 5.	일용고용 인력이용 여부	31
표 3- 6.	적기영농이 어려운 주요품목	31
표 3- 7.	적기영농이 어려운 주요 농작업	32
표 3- 8.	농작업인력 구인이 어려운 이유	32
표 3- 9.	인력업체 인력들의 농작업 선호 현황	33
표 3-10.	인력투입 및 선호분야	34
표 3-11.	인력업체 전체규모 및 농업부문 투입	35
표 3-12.	주요 농가인력 투입 대상	36
표 3-13.	인력요청 시기 및 최근 변화	37
표 3-14.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이 많은 품목	38
표 3-15.	지역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임금	39
표 3-16.	지역별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기간	39
표 3-17.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신분	40
표 3-18.	2010년 도입쿼터	41
표 3-19.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의 문제점	41
표 3-20.	고용인력 구하기 어려운 이유	44

제4장

표 4- 1.	농업·농촌 노동력부족 해결을 위한 제안	51
표 4- 2.	농어촌 인력은행(농어업 고용촉진센터) 운영 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52
표 4- 3.	농업·농촌부문 외국인 근로자 안정공급 방안	54
표 4- 4.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촌지원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56
표 4- 5.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촌지원정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56

표 4- 6.	농업부문의 청년인턴제 도입에 대한 농업인 의견	58
표 4- 7.	농업부문의 청년인턴제 도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59
표 4- 8.	농관련 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정책에 대한 의견	60
표 4- 9.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정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60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농식품부문 전후방 관련산업과 서비스부문 구분	9
그림 2- 2. 식품산업의 고용비중 추이	13
그림 2- 3. 식품유통업 부문별 고용 비중	15
그림 2- 4. 농어촌지역 고용 변화	1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가경제 차원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영향으로 청장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의제임.
- 농식품분야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이나, 실상 일자리 창출보다 오히려 농업인력 공급이 부족한 ‘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인 조달이 더 중요함.
 - 농가 가구 수는 2000년 1,383천 가구에서 2008년 1,212천 가구로,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4,031천 명에서 3,187천 명으로 각각 12.4%, 20.9% 감소하였음(농림수산식품부, 200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년 4월 전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3.3%가 ‘인력부족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 향후 우리 농업은 원예·축산부문에서 첨단시설농업과 부문별 규모화·전문화·기업화가 중요하여 자가노동보다 고용노동이 더욱 요구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농업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불일치가 지속, 심화될 경우에는 고용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크나큰 장애요인이며, 걸림돌(bottleneck)로 작용할 것임.

-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자는 편한 일자리와 고임금 취업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1차산업보다 2, 3산업을 선호하는 추세임(농업·농촌부문의 취업은 저차산업 취업으로 인식하여 3D업종으로 취급)
- 또한 경기회복 또는 호황 시에는 3D업종과 농촌지역의 인력이 빠져 나가 편한 일자리, 고임금 산업으로 이동하는 반면, IMF 외환위기와 같이 경기 침체 시에는 취업을 위해 3D산업, 농촌지역으로 취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농업·농촌 지역은 농작물의 적기 파종과 수확작업을 위해 노동력 수요가 계절성을 띠게 되어 ‘농한기인력 유희 - 농번기인력 부족’의 특징이 있음.
 - 파종기, 수확기에는 수요집중으로 인력난에 직면하여 적기영농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그 외 기간에는 자가노동력도 남아도는 계절적 미스매치 발생
- 한편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농사일 중 고된 농작업의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들을 활용하는 추세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어렵고 (고용 기간 제한)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소통, 숙식, 작업·기술 전수 문제가 크며, 외국인 노동자도 고된 농사보다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취업을 선호하여 이직탈농 경향이 있고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규제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함.
- 이러한 심각한 배경이 있음에도 그동안 농업·농어촌 분야의 고용 관련실태와 동향, 전망에 대한 연구와 기초자료가 크게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농축산업부문의 정밀한 고용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통계의 심층분석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전화·우편설문)를 실시하고 고용인력 부족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문제점을 발굴하여 농식품 및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선행연구 검토

- 농산업의 고용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정도영·장지용·박재운(2010), 김철민·이명기·한호석(2008), 최지현 외(2009) 등이 있음. 이들 연구는 산업연관표 부속표인 고용표를 토대로 농림어업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취업유발효과 및 부가가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의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함.
 - 김철민·이명기·한호석(2008)은 우리나라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추정방법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음.
 - 정도영·장지용·박재운(2010)은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농림어업의 고용구조 및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효과 변화추이를 분석하였음.
 - 최지현 외(2009)는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의 고용구조(부가가치 및 종사자 수)를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 농촌의 고용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성우·임형백·조중구(2003), 이성우·임형백·고금석(2003) 등이 있음.
 - 이성우·임형백·조중구(2003)는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성우·임형백·고금석(2003)은 도농 간 이동자의 고용기회 및 기회편익 측정을 통해 분석한 바 있음. 이러한 도농 간 고용기회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의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박영구·이승렬(2006)은 농촌의 인구 및 고용기회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와 고용기회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지역사례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농촌의 고용기회를 통해 인구이동이 일어날 경우 장기적인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한편, 김윤성(2010)은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노동투입을 비교하여 친환경농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현황 및 문제는 설동훈(1997, 2006), 이종구 외(2005), 임현진 외(2000) 등 상당히 많이 연구되었으나,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연구는 정명채 외(1997)의 농림부문 해외인력 활용방안 연구 이후 수행된 연구가 거의 없음.
 - 정명채 외(1997)는 해외인력 수요가 높은 축산업과 시설농업부문에 대한 해외인력허용을 주장하고, 농림축협중앙회에서 관리토록 하자는 제안을 함. 또한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을 내국인의 50% 수준까지 올려줄 것을 제안함. 그러나 대량실업이 일어났던 IMF 시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만큼, 허용인원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제안을 함께 제시함.
- 일반적인 산업부문의 고용구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농업 또는 농촌의 고용 및 노동력 수급에 관한 현황 또는 실태조사, 노동력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의 기초조사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가 있으나, 인구학적인 특성에 대한 조사(인적특성, 학력 및 전공, 근속연수, 임금수준 등)에 한정하고 있어 농산업분야 고용문제 및 실태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부족
 - 이정환 외(1986)는 10년간(1986~1995) 농업부문 장기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후속연구가 거의 없음.

3.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부족으로 실태 및 현황조사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이를 위해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설문조사(서면 및 전화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헌조사는 고용관련 연구 보고서, 고용 및 노동시장 이론 검토 등을 중심으로 실시함.
- 통계자료 분석은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산업연관표의 고용표 등을 활용하였음.
-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

·대상: 연구원 KREI 리포터, 관측센터 농가조사 대상자인 농업인, 인력회사 등
 ·내용: 품목별, 시기별 노동수급 현황 및 애로점
 ·분석: 품목별, 지역별, 시기별 노동수급 분석

- 현장조사는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국내농업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지출장을 실시함.
- 또한, 관련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활용함.
-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 범위와 방법을 기초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구성하였음.
-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 제2장에서는 농식품분야 및 농어촌지역의 고용에 대한 거시적 조명을 위해 산업적인 측면과 지역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고용현황을 정리하였음.
 - 제3장에서는 미시적 조명으로 농업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 농업인, 농촌인근 인력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전화조사·우편조사·현장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음.
 - 제4장에서는 그간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농업인력 정책방향 및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제5장에서는 앞장에서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 등을 언급하였음.
 - 부록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인력 수급실태 특징과 연관된 노동이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정리하였음. 또한, 농업인력 수급실태 조사를 위해 사용한 여러 조사표들도 수록하였음.

제2 장

농식품분야 및 농어촌지역 고용현황

1. 농식품산업 부문 고용현황과 특징

1.1. 농식품산업부문 고용현황

1.1.1.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 산업별 취업자 수

- 농림어업 취업자는 '09년 1,648천 명으로 '00년 2,243천 명에 비해 26.5% 감소
 - 전체 취업자에서 농림어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0년 10.6%에서 '09년 7.0%로 3.6%p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09년 1,936천 명으로 '00년(1,919천 명)보다 0.9% 증가
 - 전체 취업자 중 비중은 8.2%로 감소

1.1.2. 산업별 사업체 조사결과 종사자 수

-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는 '08년 161천 명,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6.5% 수준

* 통계청 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1~9인 소규모 음식료품 제조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 음식점업 종사자는 '08년 1,578천 명으로 '00년 1,430천 명에 비해 10.3% 증가
- '08년 음식료품 도매업 종사자는 205천 명, 음식료품 소매업 종사자는 167천 명 수준

표 2-1. 농식품부문 취업자 수 및 종사자 수

단위: 천명, %

	'00	'05	'06	'07	'08	'09
□ 총취업자 ¹⁾	21,156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 농림어업	2,243	1,813	1,781	1,723	1,686	1,648
(총취업자 대비)	(10.6)	(7.9)	(7.7)	(7.4)	(7.2)	(7.0)
○ 숙박 및 음식점업	1,919	2,058	2,049	2,049	2,044	1,936
(총취업자 대비)	(9.1)	(9.0)	(8.9)	(8.7)	(8.7)	(8.2)
○ 제조업	4,294	4,130	4,057	4,014	3,963	3,836
(총취업자 대비)	(20.3)	(18.1)	(17.5)	(17.1)	(16.8)	(16.3)
□ 식품산업 종사자A+B)	1,589	1,603	1,607	1,731	1,739	-
○ 음식료품 제조업(A) ²⁾	158	158	157	163	161	-
-사료 제외	152	151	150	155	153	-
(전체 제조업 종사자 대비) ³⁾	(6.9)	(6.5)	(6.3)	(6.5)	(6.5)	-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⁴⁾	160	194	191	204	210	-
-담배 제외	-	189	186	199	205	-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⁴⁾	243	176	179	180	169	-
-담배 제외	-	171	175	175	167	-
○ 음식점업(B) ⁴⁾	1,430	1,445	1,450	1,567	1,578	-

주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수('05년부터는 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3)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음식료품 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

4)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종사자 수(음식점 및 주점업)

※ 용어정의

- 취업자: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조사대상주간(매월 15일을 포함한 1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
- 비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로, 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관여하는 자
- 종사자: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종사자 + 임시 및 일일 종사자 + 무급종사자
 - 자영업주: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
 -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주의 가족으로, 정상작업(영업) 시간의 1/3이상 종사하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
 - 상용종사자: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포함
 - 임시 및 일일 종사자: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
 - 무급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접대부, 외판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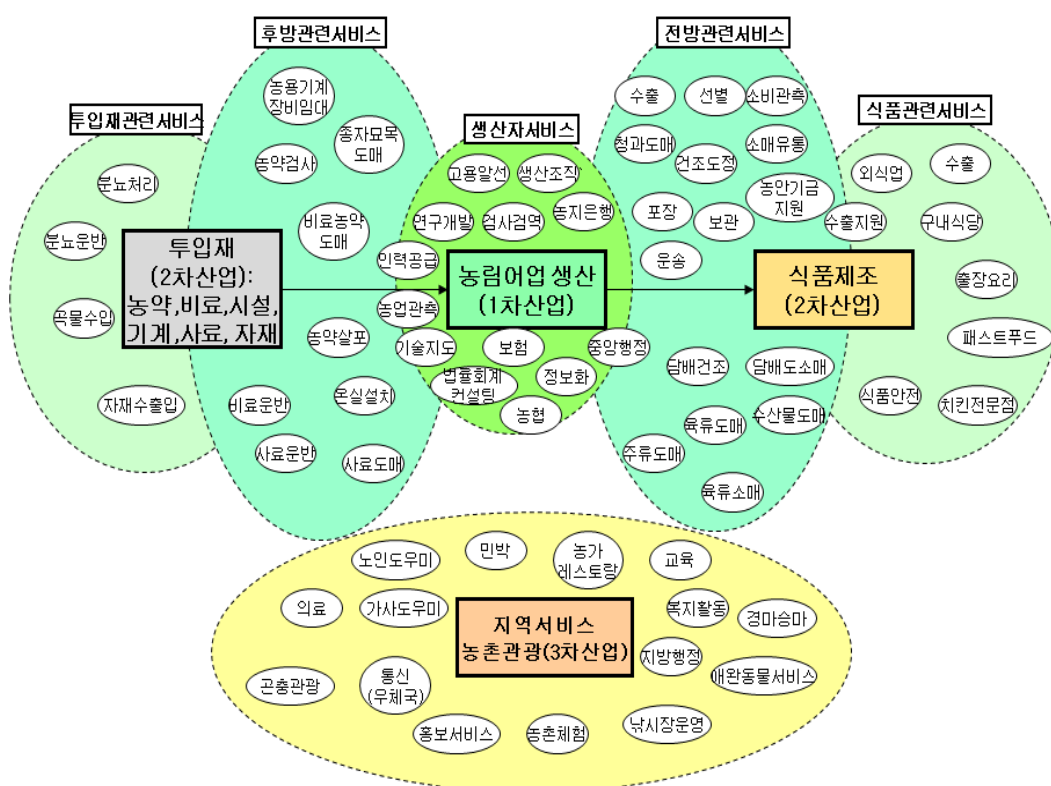
1.2. 농식품부문 고용 특징

1.2.1. 전후방 관련산업 및 서비스활동의 다양성

- 농림어업 생산 및 식품부문은 전후방 관련 서비스활동이 많아 고용 흡수력이 큼.

- 농촌지역은 증가하는 농촌관광서비스와 농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차원의 고용 흡수력이 큼.

그림 2-1. 농식품부문 전후방 관련산업과 서비스부문 구분



1.2.2. 고용 유발의 질적 변화

- 2007년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3.9명이며, 그 중 농림어업이 46.8명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18.1명, 건설업 16.8명, 광업 10.3명, 제조업 9.2명, 전력·가스·수도 3.5명 순임.

* 취업유발계수: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 서비스업에서는 음식 및 숙박업이 36.5명, 도소매업이 29.5명으로 높으며, 제조업 중에는 음식료품이 23.0명, 인쇄 및 복제업이 19.4명으로 높음.
- ⇒ 농림어업, 식품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다는 것은 1)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다, 2) 투자액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크다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농림수산 식품분야 취업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추세임.
 - * 농림어업: '00년 62.9명 → '05년 51.1 → '07년 46.8
 - * 음식료품제조: '00년 32.3명 → '05년 24.7 → '07년 23.0
 - * 음식·숙박업: '00년 43.0명 → '05년 37.8 → '07년 36.5
 - * 전산업: '00년 18.1명 → '05년 14.7명 → '07년 13.9명
- ⇒ 이는 시간이 갈수록 농식품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빠르며, 투자액 대비 고용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어든다는 의미
- 시사점: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클 때 농식품부문은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줄어들지만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고급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 가능

표 2-2.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원,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증감률		
					'00~'05*	'05~'06	'06~'07
농 립 어 업	62.9	51.1	50.2	46.8	-4.1	-1.8	-6.8
광 업	9.8	10.4	10.1	10.3	1.2	-2.9	2.0
제 조 업	13.2	10.1	9.6	9.2	-5.2	-5.0	-4.2
음 식 료 품	32.3	24.7	23.9	23.0	-5.2	-3.2	-3.8
섬유·가죽제품	22.7	17.2	15.6	15.5	-5.4	-9.3	-0.6
목재·종이제품	14.3	12.3	12.0	11.5	-3.0	-2.4	-4.2
인쇄·복제	19.5	17.1	17.8	19.4	-2.6	4.1	9.0
석유·석탄제품	0.9	1.0	1.1	1.3	2.1	10.0	18.2
화학제품	9.7	8.5	8.1	7.7	-2.6	-4.7	-4.9
비금속광물제품	13.8	11.0	10.2	9.7	-4.4	-7.3	-4.9
제1차금속제품	5.3	5.1	5.3	5.7	-0.8	3.9	6.8
금속제품	14.1	12.9	13.1	12.8	-1.8	1.6	-2.3
일반기계	16.0	12.2	11.8	11.2	-5.3	-3.3	-5.1
전기·전자기기	14.5	8.3	7.3	6.5	-10.6	-12.0	-11.0
정밀기기	19.4	13.9	12.4	11.6	-6.5	-10.8	-6.5
수송장비	12.7	9.9	9.9	9.5	-4.9	0.0	-4.0
기타제조업제품	21.4	16.4	15.4	14.5	-5.2	-6.1	-5.8
전력·가스·수도	5.3	3.6	3.5	3.5	-7.4	-2.8	0.0
건설업	17.0	16.6	17.3	16.8	-0.5	4.2	-2.9
서비스	21.5	18.4	18.2	18.1	-3.1	-1.1	-0.5
도·소매	40.0	30.4	29.6	29.5	-5.3	-2.6	-0.3
음식·숙박	43.0	37.8	36.5	36.5	-2.5	-3.4	0.0
운수·보관	16.5	15.4	15.0	14.4	-1.4	-2.6	-4.0
통신·방송	12.8	9.7	10.0	10.4	-5.4	3.1	4.0
금융·보험	13.9	10.5	10.4	10.0	-5.5	-1.0	-3.8
부동산·사업서비스	10.6	11.7	12.1	12.4	2.0	3.4	2.5
공공행정·국방	18.4	14.7	14.3	14.2	-4.4	-2.7	-0.7
교육·보건	21.4	20.2	20.2	20.6	-1.1	0.0	2.0
사회·기타서비스	32.3	24.9	25.0	23.9	-5.1	0.4	-4.4
전 산 업	18.1	14.7	14.3	13.9	-4.1	-2.7	-2.8

자료: 한국은행(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1.2.3. 농림어업 생산 및 전방관련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나, 후방관련 투입재산업 및 전방 관련 서비스부문 고용은 증가추세

- 농림어업생산(1차산업)과 전방의 식품제조업 및 기타 제조업(2차산업) 고용은 감소추세이나, 후방의 농자재산업과 특히 전방 관련 서비스부문 고용은 증가추세로, 농식품부문의 일자리창출에서 농자재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표 2-3. 농림어업 부문별 고용자 수

단위: 천 명, %

구 분	2000	2008	증감률
농림어업(생산, 1차산업)	2,243	1,686	-3.5
생산서비스부문	33	41	2.8
전방관련 가공·제조업(식품제외)(2차)	149	143	-0.5
식품제조업(2차)	225	217	-0.5
농자재부문(2차)	110	169	5.5
후방관련 서비스부문	24	23	-0.5
전방관련 서비스부문	1,938	2,077	0.9
계	4,723	4,356	-1.0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농림수산물 주요통계(농림수산물부).

- 후방관련 서비스: 농림수산업 투입재(비료, 농약, 농기계, 하천사방, 선박 등)의 물류 및 도소매업, 생산 및 경영지원 컨설팅 및 R&D, 인력지원 및 농지거래서비스, 재해보험 등
 - 전방관련 서비스: 농림수산업 산출물의 물류 및 도소매업, 검역 등
 - 식품관련 전후방관련 서비스: 물류 및 도소매업, 검역, 음식점, 외식업 등
- ※ 농림수산물 산업부문별 구체적인 업종현황은 부표 참조

1.2.4. 식품부문은 외식산업과 식품유통업 고용 흡수력이 높음.

- 식품산업은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및 외식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 경제에서 부가가치 기준 5%, 고용인원 기준 10% 비중 점유(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식품산업의 고용비중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간 외식산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식품유통업, 식품제조업 순임.

표 2-4. 식품산업의 규모(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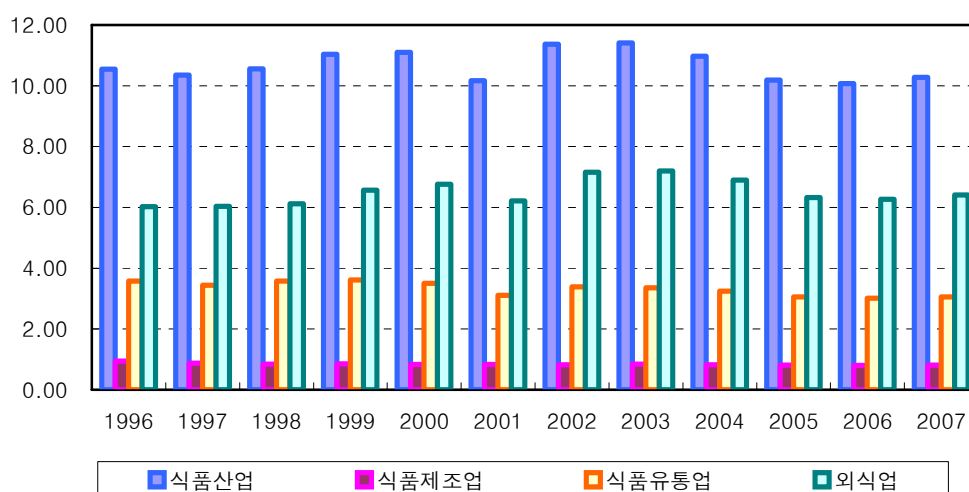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구분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	계
매출액	52,537	109,943	56,952	219,431
부가가치	20,609	10,490	14,514	45,61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그림 2-2. 식품산업의 고용비중 추이

(단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조사』

1.2.5. 식품제조업 중 축산가공, 청과가공 고용비중 증가

- 식품제조업은 제조업부분 부가가치의 5.4%, 고용의 15.4%를 각각 담당하여 국가경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 차지
- 식품제조업은 종사자 9인 이하의 사업장 비중이 53.2%인 반면 100인 이상은 3.2%로 매우 영세

표 2-5. 식품제조업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2006)

단위: %

구 분	축산가공	수산가공	청과가공	곡물가공	조미료	음료	기타식품	계
1인~9인	3.8	13.5	5.9	18.8	3.4	2.0	5.8	53.2
10인~19인	3.0	5.5	3.1	5.1	2.2	1.4	3.1	23.5
20인~49인	3.0	3.2	2.3	2.5	1.2	1.2	2.1	15.5
50인~99인	1.3	0.7	0.6	0.6	0.4	0.4	0.6	4.6
100인 이상	0.9	0.4	0.2	0.7	0.3	0.2	0.4	3.2
계	12.0	23.3	12.2	27.8	7.5	5.2	12.1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 축산가공업과 곡물가공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 비중이 50% 이상이며, 고용 비중은 각각 20% 이상으로 높음.

표 2-6. 식품제조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축산가공	17.2	16.3	28.3	22.7	27.1	29.6
수산가공	13.8	15.6	12.5	8.4	8.0	8.5
청과가공	3.6	4.3	5.4	4.0	4.9	6.6
곡물가공	39.1	37.1	33.1	31.4	30.4	26.2
조미료	14.9	11.5	7.9	10.1	8.8	8.5
음료	9.5	13.0	10.0	14.6	14.1	13.0
기타	2.0	2.2	2.8	8.7	6.7	7.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 1985년 이후 축산가공, 청과가공, 기타 식품제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은 증가추세인 반면, 수산가공과 곡물가공업은 감소추세임.

표 2-7. 식품제조업의 부문별 고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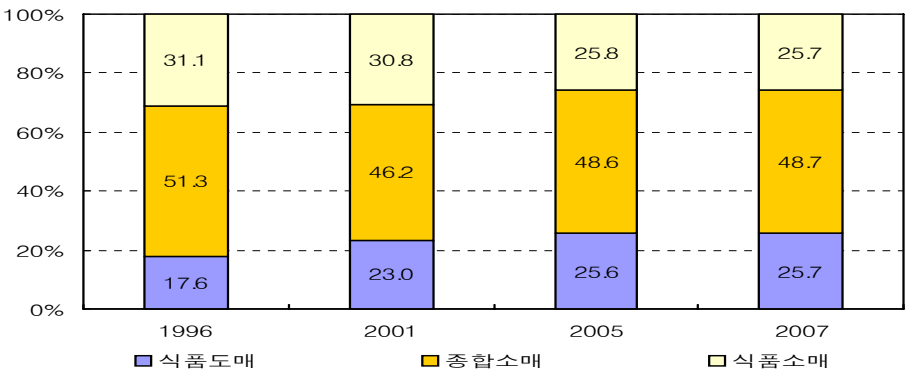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축산가공	9.2	11.8	18.8	19.2	20.8	22.1
수산가공	32.2	33.3	25.7	22.6	18.9	17.9
청과가공	6.2	6.8	8.5	8.6	10.3	11.4
곡물가공	38.2	34.3	30.9	25.5	25.4	22.9
조미료	7.6	6.6	7.1	7.3	7.0	7.2
음료	5.1	5.5	6.2	7.3	6.4	7.0
기타	1.6	1.7	2.8	9.6	11.3	11.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1.2.6. 식품유통업 고용 중 도매업 비중 증가

- 식품유통업 고용에서 종합소매업 비중이 48.7%로 가장 높음. 식품소매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7년 25.7%임. 식품도매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여 최근 25.7%임.

그림 2-3. 식품유통업 부문별 고용 비중



- 종사자 수 측면에서 2인 이하 종사자 비중이 47.7%, 9인 이하 종사자 비중은 72.4%로 식품유통업 규모가 매우 영세함.

표 2-8. 식품유통업 종사자 규모별 비중(2005년)

단위: %

구분	식품도매업	종합소매업	식품소매업	계
2인 이하	6.3	21.6	19.8	47.7
3-9인	9.9	10.2	4.7	24.7
10-49인	6.7	4.5	1.1	12.3
50인 이상	2.6	12.3	0.3	15.3
계	25.6	48.6	25.8	100.0

자료: 통계청, 2005. 『서비스업 총조사』

1.2.7. 식품산업에서 외식업 고용비중이 60%이상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음.

- 농림식품분야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외식산업은 서비스부분 매출액의 3.8%, 고용의 15.4% 점유
- 외식업은 식품산업에서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식품산업의 60% 이상 점유
- 외식업 중 한식업의 고용 비중이 약 62%로 가장 높으며, 기관 구내식당업의 고용 비중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표 2-9. 외식업 부문별 고용 비중

단위: %

	1996	2001	2005	2007
한식	61.7	60.3	62.4	62.4
중식	8.3	7.2	6.2	6.0
일식	2.2	2.5	2.1	2.6
서양식	5.9	5.5	4.6	4.7
기타서양식	1.3	0.5	0.4	0.2
기관구내	0.1	2.3	2.5	2.8
기타음식점	20.6	21.7	21.8	21.3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서비스업 총조사」

- 그러나 외식업의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매우 높아, 종사자 수 측면에서 9인 이하 사업장 비중은 97.9%에 달함.

표 2-10. 외식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2005년)

단위: %

구분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기관 구내식	기타 음식	계
2인이하	39.9	2.7	0.3	1.1	0.1	0.2	17.8	62.1
3-9인	24.6	2.8	0.8	1.2	0.1	0.4	5.8	35.8
10-49인	0.9	0.1	0.1	0.2	0.0	0.2	0.5	2.0
50인이상	0.02	0.0	0.0	0.04	0.01	0.0	0.02	0.1
계	65.4	5.6	1.2	2.6	0.2	0.8	24.2	100.0

자료: 통계청. 2005. 「서비스업 총조사」

- 국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은 모두 OECD 평균수준을 하회함.

표 2-11. 한국과 OECD의 도소매·음식숙박업 비교

단위: %, 천 달러/명

구 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인당 실질부가가치 평균
한 국	-0.25	13.62
OECD 평균	1.44	35.92

주: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과 인당 실질부가가치 수준은 1997~2007년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DB.; 한국은행, ECOS DB; OECD, STAN DB..

2. 농어촌지역 고용현황과 특징

2.1. 농촌지역 고용현황

2.1.1. 농어촌지역 취업자수 현황

- 2008년 현재 농어촌지역 총 취업자 수는 463만 4,004명임.
 - 농업부문 종사자는 168만 6,000명(36.4%), 비농업부문 종사자는 294만 8,004명(63.6%).
- 2000~2008년간 농어촌지역 취업자 수는 115,862명 감소함(-2.4%).
 - 농업 종사자 수는 55만 7,000명 감소하였으나(-24.8%), 비농업 종사자 수 오히려 44만 1,138명 증가하였음(17.6%).

그림 2-4. 농어촌지역 고용 변화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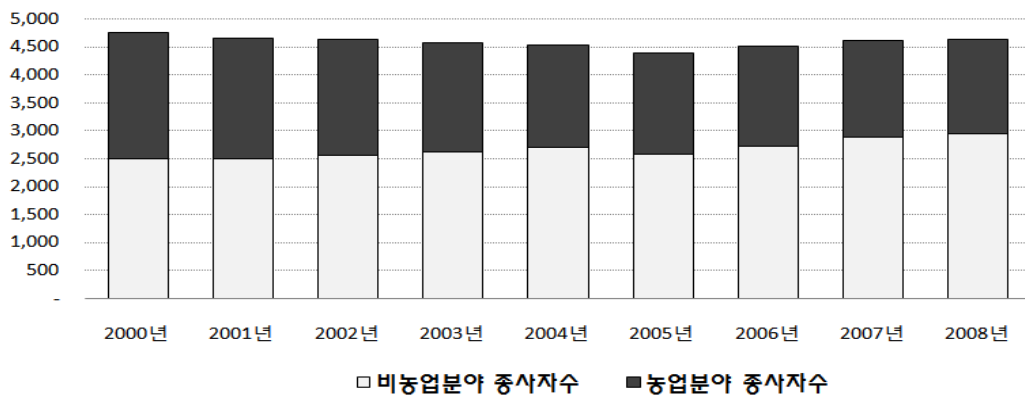


표 2-12. 농어촌지역 고용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량	증가율
비농업부문 종사자수	2,507	2,500	2,557	2,620	2,698	2,582	2,726	2,885	2,948	441	17.6
농업부문 종사자수	2,243	2,148	2,069	1,950	1,825	1,815	1,785	1,726	1,686	-557	-24.8
총 취업자수	4,750	4,648	4,626	4,570	4,523	4,397	4,511	4,611	4,634	-116	-2.4

주: 읍·면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정의함.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농림수산물 주요통계(농림수산식품부).

2.1.2. 농어촌지역 산업별 고용현황

- 86개 군 지역에서는 특히 자동차부품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분야와 복지시설 운영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
 - 기타 식품제조업에서 11,485명의 취업자 수 증가(65.6%)

- 거주 및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 총 20,461명 증가(159.0%)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총 30,388명)
-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내수경제’의 위축을 반영한 것임.

표 2-13. 농촌지역에서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산업분야(2000~2008년)

단위: 명, %

고용이 증가한 산업분야			고용이 감소한 산업분야		
산업	고용증감량	고용증감률	산업	고용증감량	고용증감률
자동차부품 제조업	22,897	635.0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3,323	-34.4
기타 식품 제조업	11,485	65.6	종합 소매업	-8,851	-20.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1,146	105.9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8,214	-27.3
전자부품 제조업	9,756	148.9	보험업	-7,711	-4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315	397.2	어로 어업	-7,615	-98.4

주: 2000년과 2006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2.1.3. 농어촌지역 지역별 고용현황

- 취업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지역은 청원군, 울주군, 당진군, 진천군, 달성군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크게 증가
 - 취업자 수 증가분 중 제조업 분야의 비율: 청원군 55.1%, 울주군 34.5%, 당진군 58.0%, 진천군 79.6%, 달성군 42.2%
- 완도군, 하동군, 의성군, 영동군, 장흥군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

- 증가한 지역들과 달리 산업 전분야에 걸쳐 고용이 감소: 19개산업 대분류 중 10개 이상의 산업분야에서 취업자 수 감소

표 2-14. 취업자 수가 현저히 증가 또는 감소한 농촌지역(2000~2008년)
단위: 명, %

증가한 지역			감소한 지역		
지역	고용증감량	고용증감률	지역	고용증감량	고용증감률
청원군	28,051	94.8	완도군	-12,970	-52.1
울주군	17,250	36.1	하동군	-2,120	-14.9
당진군	13,307	48.6	의성군	-2,071	-14.7
진천군	12,357	55.3	영동군	-1,713	-12.6
달성군	11,784	27.4	장흥군	-1,552	-13.4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2.1.3. 사회서비스 분야 농어촌지역 고용 현황

-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 54.7%
 - 농어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건, 의료, 복지분야 서비스 수요 증가와 농어촌 복지 관련정책의 확대에 따른 서비스공급 증가를 반영한 것임.
 - 이러한 증가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

표 2-15. 사회 서비스분야 농어촌지역 고용 현황(2000~2008년)
단위: 명, %

구분	2000	2008	증감량	증감율
사회서비스 분야	63,097	97,612	34,515	54.7
사회서비스 이외 산업분야	1,139,734	1,287,805	148,071	13.0
합계	1,202,831	1,385,417	182,586	15.2

자료: 사업체기초통계(통계청).

2.1.4. 농공단지 고용현황

- 농공단지는 1984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에서 12만 명 정도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 전국 농공단지 고용인력: 약 12만 명(단지당 328명, 업체당 26명)
 - 2008.3월 전국 363개 농공단지에 총 5,283개의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공장가동업체율은 86.3%
 - 충남, 경북, 경남, 충북의 4개 지역이 전국 농공단지 전체 고용의 63.8%를 차지
 - 업종별 입주 현황: 기계류 제조업이 15.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음료(13.6%), 석유화학(13.3%), 기타(13.3%), 전기전자(10.7%)의 순
 - 1990년대 초반 잠시 주춤했으나 이후 농공단지 조성 실적은 일정 수준을 유지

표 2-16. 시기별·지역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위: 개

구분	85년이전	85-90	91-95	96-'00	00-05	05년 이후	계
부 산	-	1	-	-	-	-	1
대 구	-	2	-	-	-	-	2
광 주	-	1	-	-	-	-	1
울 산	-	2	1	1	-	-	4
경 기	-	1	-	-	-	-	1
강 원	1	19	4	-	6	1	31
충 북	1	30	4	2	3	1	41
충 남	1	43	10	4	12	5	75
전 북	1	19	8	3	7	4	42
전 남	1	27	7	-	5	3	43
경 북	1	36	10	5	1	1	54
경 남	1	27	13	4	10	10	65
제 주	-	2	1	-	-	-	3
합 계	7	210	58	19	44	25	36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 말 기준)

- 농공단지정책이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창출하여 제조업체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에는 농공단지가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자생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중앙정부 여러 부처가 각기 농공단지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주로 기업이 입주하기 전 단지조성사업 지원에 정책이 집중적으로 투입됨.
 -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력확보 지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의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짐.

2.1.5. 농촌관광 분야 고용현황

- 농촌관광의 도입기(’84년~’00년)에는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개인사업 위주의 농어촌 휴양사업을 시작
 - 관광농원 및 민박 등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농외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
- 농촌관광의 전환기(’01~’07)에는 체험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단위 농어촌 체험관광기반이 전국적으로 형성됨(’09년 544개소).
 - 체험마을은 개인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촌 주민의 생업, 자연경관 등을 매개로 도시민과 교류하는 장으로 발전
 - 마을 이용객 수는 ’04년 928천 명에서 ’09년 3,317천 명으로 3.5배 증가하였고, 매출액 규모는 ’04년 74억 원에서 ’09년 613억 원으로 8배 증가하였음.
- 또한, 체험마을 외에 농어촌 축제, 테마공원, 어촌·어항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관광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09년 농어촌 축제 356개, 테마공원 22개소, 어촌·어항관광시설 5개소 개발
- 그러나 ’00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농촌관광정책사업은 상당히 많은 양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정확한 성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농촌체험관광 마을을 방문한 도시민 수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에 상응하여 발생한 일자리 수를 추정하기는 어려움.
- 향후에도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 ‘도보·자전거 답사 농촌관광(예: 올레길, 둘레길, 마실길 등)’, 개별 농가 민박 형태의 농촌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한다면 농촌지역의 파트타임 또는 전업 일자리 발생원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임.
- 특히, 현농촌체험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및 콘텐츠 부족, 서비스 및 전문인력부족 등에 대해 농촌관광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활성화 방안 마련 시 귀농귀촌의 고급·전문인력을 고용·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표 2-17.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어촌관광 주요 특징 비교

구 분	유 럽(영·프·독)	일 본	한국
목 적	◦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농가소득 창출	◦ 농촌 지역 환경보전, 도농교류 활성화	◦ 농외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주 요 특 징	◦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체험, 승마 등 시설투자 지원	◦ 지자체·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 경영형 농촌관광 추진	◦ 농가단위에서 마을단위 사업으로 전환 ◦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및 경관조성 지원

자료: 농림수산물부(2010), 『농식품분야 일자리전략회의』

표 2-18. 농림수산물 산업 부문별 업종 현황

구 분	업 종
농림어업 부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과실작물 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콩나물 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젓소 사육업, 육우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말 및 양 사육업, 그외 기타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용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원양 어업,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해면 양식 어업, 내수면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구 분	업 종
농어업 생산 서비스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농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 행정
농림어업 전방관련 (식품제외) 부문	일반 제재업,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제품 제조업, 돛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펄프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식품부문	도축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과일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타 발효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소주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담배제품 제조업

구 분	업 종
농자재부문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후방관련 서비스부문	담배 재건조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사료 도매업,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비료 및 농약 도매업
전방관련 서비스부문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곡물 도정업, 곡물 제분업,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축산분뇨 처리업, 곡물 도매업,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과일 및 채소 도매업, 육류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육류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가공식품 도매업, 빵 및 과자 도매업, 낙농품 도매업,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주류 도매업, 비알콜음료 도매업, 담배 도매업,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곡물 소매업, 육류 소매업, 수산물 소매업, 과일 및 채소 소매업, 빵 및 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음료 소매업, 담배 소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농산물 창고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이동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외 기타 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자료: 9차 표준산업분류표

제 3 장

농업인력 수급실태 조사·분석

1. 조사방법 및 내용

1.1.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 KREI Reporter 187명, 농업관측 지역자문위원(모니터) 663명 등 총 850명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해 시군지역의 고용실태 파악
 - 응답자 총 481명(Reporter 179명, 지역자문위원 302명), 응답률 56.6%
- 조사내용은 지역별 고용노동력 수요, 조달방법, 외국인 고용실태 및 인력조달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조사함.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부록의 조사표 참조

1.2. 농업인 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농업인) 196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799명(응답률은 40.8%)의 결과를 분석함.
- 조사내용은 농업인들의 고용노동의 필요성, 상시고용과 일일고용의 이용현

황 및 조달방법, 외국인 고용의 실태 및 조달방법, 고용노동력(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만족도, 향후 인력정책들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함.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부록의 조사표 참조

1.3. 농촌인근 인력회사 조사

- 전국 주요농산물 주산지 인근의 인력회사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해 270개 인력회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함.
- 조사내용은 인력회사 인부들(외국인 노동자 포함)의 농작업에 대한 선호도, 인력배치 시 고려사항, 농작업 투입되는 연령별 성별 정도 등을 조사함.
 -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부록의 조사표 참조

1.4. 현장조사

-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농업인 조사, 인력회사 조사 내용들에 대한 파일럿조사(pilot survey, 예비조사) 실시

2. 농업인력 수급실태

2.1. 농촌지역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 심각

- 농축산업에 고용되는 인력의 종류는 1) 마을 및 인근마을의 품앗이 또는 임금고용인력, 2) 인근 도시(시·군·읍)의 인력회사를 통한 조달, 3) 전문작업

- 단, 4) 합법/불법 외국인 근로자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임.
- 전화설문조사 결과, 농작업 인력을 주로 인근 마을에서 지인 또는 인력공급 조직을 통해 공급하거나(42%), 시군읍 지역 인력수급회사를 통해 공급(35%)
 - 과거에 많이 의존했던 품앗이는 15%에 불과하며 기타 가족 또는 친족 노동과 기타(외국인 근로자) 활용 비중은 낮음.
 - 축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상시고용 비중이 높아 기타 비중이 41%에 달함.

표 3-1. 농촌지역 농작업 인력공급원 비중

단위: %

구분	품앗이	인력공급회사	주변 마을	가족·친족	기타 (외국인 등)	계
전체	15.1	34.6	41.8	6.8	1.7	100.0
경중	20.9	30.2	41.1	6.7	1.1	100.0
과수	16.1	22.6	46.0	12.1	3.2	100.0
축산	5.3	16.9	10.6	26.1	41.1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 전문작업단을 통한 인력공급은 벼농사 및 밭농사의 수확기에 많이 이루어짐.
 - * 전문작업단은 개별팀을 구성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 농촌지역, 농업부문은 현재 및 향후에 고용인력의 공급이 절대적, 계절적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 미스매치’ 발생
 - 원인은 주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이농, 공공근로사업에 의한 인력 유출, 고용노동인력의 농작업 비선호, 보수 및 근무환경 상대적 열악 등
- 설문조사 결과,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83.3%에 달해 인력 수급 문제 심각
 - 특히 인력공급 부족으로 인해 벼의 이앙 및 수확, 고추·양파 수확, 딸기 등 시설작물의 정식 및 수확기 등의 적기영농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함.

표 3-2. 농작업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기영농 어려움 경험

단위: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합계
비율	50.0	33.3	11.1	5.6	0.0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 전국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자가노동력 외의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의 비중이 약 73%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 차지

표 3-3. 고용노동력의 필요성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매우 그렇다	261	32.6
약간 그렇다	319	39.9
그저 그렇다	121	15.1
아니다	84	10.5
매우 아니다	4	5.0
무응답	10	12.4
합계	799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 그러나 실제로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의 비중은 11% 정도인 반면, 일용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6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한시적 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상시고용 인력이용 여부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있다	88	11.0
없다	700	87.6
무응답	11	13.7
합계	799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표 3-5. 일용고용 인력이용 여부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있다	487	60.9
없다	288	36.0
무응답	24	30.1
합계	799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 노동력이 부족하여 적기에 영농작업을 통해서 생산할 때 어려움을 느낀 품목으로 밭농사에서는 고추, 과수농사에서는 사과, 축산업에서는 한우인 것으로 나타남.

표 3-6. 적기영농이 어려운 주요품목

단위: 명(%)

구분	밭농사		구분	과수농사		구분	축산업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토마토	10	6.9	포도	20	12.6	한우	12	70.6
고추	62	43.4	사과	64	40.3	낙농	1	5.8
감자	13	9.1	배	25	15.7	사료	2	11.9
마늘	32	22.4	감 및 감귤	35	22.0	돼지	1	5.8
양파	26	18.2	복숭아	15	9.4	사슴	1	5.8
합계	143	100.0	합계	159	100.0	합계	17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 노동력이 부족하여 생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작업들을 농사별로 살펴보면 벼농사의 경우 이앙(모내기), 밭농사의 경우 수확 및 파종, 과수농사의 경우 적과 및 수확, 축산업의 경우 벗짚 작업 및 청소 작업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적기영농이 어려운 주요 농작업

단위: 명(%)

구분	벼농사		구분	밭농사		구분	과수농사		구분	축산업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파종	10	5.0	파종	39	17.7	적과	75	39.1	사료	4	19.0
이앙	149	74.0	수확	128	58.2	수확	69	35.9	벚짚	7	33.3
수확	31	15.4	정식	28	12.7	봉지	30	15.6	청소	6	28.6
기타	11	5.6	제초	14	6.4	기타	18	9.4	수확	2	9.5
-	-	-	기타	11	5.0	-	-	-	기타	2	9.5
합계	201	100	합계	220	100	합계	192	100	합계	21	1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 인력 조달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1순위로 농촌인구의 고령화(39.2%), 공공 근로로 인력유출(29.7%), 농촌 인력 감소(24.3%)를 들고 있음. 그 밖에 도시 노동자 수 감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이 짧아서, 과도한 임금요구 등이 있음.

표 3-8. 농작업인력 구인이 어려운 이유

단위: 명, %

문항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공공근로로 인력 유출	22	29.7	12	17.1	34	23.0
농촌인구 고령화	29	39.2	21	30.0	50	33.8
농촌 인력 감소	18	24.3	24	34.3	42	28.4
도시의 가용 노동자 수 감소	1	1.4	5	7.1	6	4.1
너무 비싼 임금 요구	2	2.7	7	10.0	9	6.1
기타	2	2.7	1	1.4	3	2.0
무응답	0	0.0	4	5.4	4	2.7
합계	74	100.0	74	100.0	148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 참고로 설문조사 결과, 전국 평균 여성 농업인력 임금은 일당 41,216원으로 일반산업 인력 임금 44,500원에 비해 3,284원 낮으며, 남자의 경우 66,431원으로 일반산업부문 임금 73,366원에 비해 6,935원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농작업 인력의 일당 임금은, 여자의 경우 전북이 43,103원으로 가장 높고, 경남이 38,845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남자는 제주가 일당 73,864원, 강원이 64,17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2.2. 농촌지역 인력회사 노동자들의 농작업 기피

2.2.1. 농촌지역 인력회사 인부들은 농작업에 대한 선호도 낮음

- 농촌지역 시군에 설립, 운영되는 인력회사는 적은 경우 한두 개에서 많은 경우 수십 개에 달하는데, 이들 인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인력은 주로 지역 내 건설업과 서비스업 종사를 선호하고 농작업은 그보다도 기피되는 3D업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인력회사에서 소개하는 인력들의 농작업 선호도는 선호 비율이 18.1%, 비선호 비율이 80.4%로 농작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인력업체 인력들의 농작업 선호 현황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백분율
아주 선호한다	3	1.1
선호하는 편이다	46	17.0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139	51.5
아주 선호하지 않는다	78	28.9
무응답	4	1.5
합계	270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농촌인근 인력회사 조사」

- 인력업체의 인력들이 농작업을 선호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일이 어려워서(41.9%), 임금이 적어서(17.4%), 일이 없어서(7.0%) 순서로 나타났음. 기

타 의견으로는 농사 경험 부족, 작업시간이 불투명해서, 햇빛 등 작업환경이 안좋아서 등이 있음.

2.2.2. 인력알선은 농작업보다 건설작업 현장으로 많이 이루어짐

- 인력업체 알선인력은 주로 철거 및 건설작업 현장(77.4%)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업체 고용인들도 철거 및 건설작업(71.1%)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변 농촌지역의 농작업(9.3%)은 2순위로 선호되었음.
- 인력업체 알선인력의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투입되는 비중과 선호도는 각각 전체의 4.1%, 6.7%로 낮아 인력회사들이 비교적 고용기간이 긴 직업을 알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철거 및 건설의 경우 높은 임금과 함께 일자리의 공급 및 과거 경험이크은 비중을 차지함. 한편, 농업분야의 경우 과거 근로경험과 좋은 작업여건이 가장 큰 선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인력업체 인력들의 선호 분야는 임금이나 작업 여건과도 관련이 있지만 일자리 선택의 문제보다는 일이 있거나 과거에 해보았던 경험 및 능력여부에 따라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인력투입 및 선호분야

단위: 개, %

투입 분야			선호 분야		
구분	빈도수	백분율	구분	빈도수	백분율
철거 및 건설	209	77.4	철거 및 건설	192	71.1
주변 농촌 농작업	28	10.4	주변 농촌 농작업	25	9.3
기간제 비정규직	11	4.1	기간제 비정규직	18	6.7
기타 및 무응답	22	8.1	기타 및 무응답	35	13.0
전국	270	100.0	전국	270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농촌인근 인력회사 조사」

2.2.3. 인력회사를 통해 농촌으로 투입되는 인력 비율은 매우 낮음

- 인력업체 고용 인력들이 농촌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혀 없거나 4명이 하인 경우가 59.9%로 나타났다.
- 또한 농업부문에 투입되는 비중이 0%인 경우가 35.1%이며, 25% 미만인 경우는 전체 68.8%를 차지함.

표 3-11. 인력업체 전체 규모 및 농업부문 투입

단위: 개, %

전체 규모			농업부문 투입 인원			농업부문 투입 비율		
구분	빈도수	백분율	구분	빈도수	백분율	구분	빈도수	백분율
100명 이상	20	7.4	20명 이상	25	9.3	50% 이상	36	13.3
50~99명	36	13.3	10~19명	40	14.9	25~50 미만	37	13.7
30~49명	92	34.1	5~9명	32	11.9	10~25 미만	57	21.1
15~29명	72	26.7	1~4명	67	24.8	0.5~10 미만	34	12.6
0~14명	39	14.4	0명	95	35.1	0%	95	35.1
무응답	11	4.1	무응답	11	4.1	무응답	11	4.1
전체	270	100.0	전체	270	100.0	전체	270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농촌인근 인력회사 조사」

- 한편, 농가로 인력을 배정할 때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로는 인부의 작업능력(29.1%)과 고용주의 요구조건(29.1%)이며, 나이 및 인부의 의사(13.1%)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2.4. 농촌 투입 인력 대부분 50~60대 고령층, 남성 비중 높음

- 인력업체에서 농촌지역에 주로 투입되는 인력들은 연령상으로는 50대 및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음.

- 인력업체에서 농가에 알선하는 주요 인력은 고령층 내국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투입 비중(남, 여 포함)은 전체의 4% 미만으로, 인력회사를 통한 농업부문 외국인 노동자 공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주요 농가인력 투입 대상

단위: 개, %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① 내국인 남성 30~40대	30	17.1	22	12.6
② 내국인 남성 50대	81	46.3	55	31.4
③ 내국인 남성 60대 이상	31	17.7	40	22.9
④ 내국인 여성 30~40대	1	0.6	5	2.9
⑤ 내국인 여성 50대	11	6.3	21	12.0
⑥ 내국인 여성 60대 이상	12	6.9	14	8.0
⑦ 외국인 남성	5	2.9	6	3.4
⑧ 외국인 여성	1	0.6	1	0.6
무응답	3	1.7	11	6.3
전체	175	100.0	175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농촌인근 인력회사 조사」

- 농가로부터 인력요청이 많은 시기는 파종 및 정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봄(48.0%)과 수확철인 가을(4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대비 소개요청은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인력요청 시기 및 최근 변화

단위: 개, %

구분	빈도수	백분율	구분	빈도수	백분율
봄(3~6월)	84	48.0	늘었다	35	20.0
여름(7~8월)	10	5.7	비슷하다	70	40.0
가을(9~10월)	72	41.1	줄었다	69	39.4
겨울(11~익년2월)	1	0.6	모르겠다	0	0.0
무응답	8	4.6	무응답	1	0.6
전체	175	100.0	전체	175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농촌인근 인력회사 조사」

2.3. 농축산업 고용인력에 외국인 의존도 심화 추세

- 시설원예, 버섯재배공장 등 상시고용에는 합법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 취업 취업사증)가 주류이며, 지역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도 유리온실 시설원예 농작업의 상근인력으로 증가추세
- 오지·벽지 축사의 상시고용 또는 고랭지채소·양념채소 등 파종·수확기 일고에는 내국인 고용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
 - 고랭지채소, 마늘, 양파 등 파종,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인근 도시의 인력회사에서 공급되는 일용직 노동자(주로 고령 여성노동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력에 투입
 -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어에 능통하고 작업숙련도도 높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적발될 위험이 있어 일시적 고용을 선호하며 고임금 요구
- * 우리나라에 체류해 있는 외국 인력은 42만 명 내외이며 그 중 불체자는 약 19만 명에 달함. 그 중 E-9 사증을 취득하고 입국한 자는 15만 명 가까이 되며 이중 불체자는 30% 정도인 45,000여명임('07년).
- 그밖에 김제 등 미작지역, 중산간 소규모 밭농업 지역은 대부분 자가 및 친족 노동력, 이웃 농가와의 품앗이, 임금지급 노동력에 의존한 농작업 수행

○ 농촌지역 농작업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들 선호

- 시설원에 작업, 축사관리 등 농작업 특성상 주말,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 잔업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력보다 제한된 체류기간 동안 휴일작업, 잔업 등으로 가급적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선호

○ 설문조사 결과, 지역에서 농작업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품목(또는 축종)은 돼지, 소, 닭, 젓소 등 축산업과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오이 등 시설원에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4.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이 많은 품목

	1순위 품목	빈도수	2순위 품목	빈도수	3순위 품목	빈도수	1~3순위 합계	빈도수
1	돼지	74	돼지	28	닭	15	돼지	106
2	파프리카	25	소	26	소	8	소	58
3	소	24	화훼	14	토마토	6	닭	35
4	닭	15	토마토	13	낙농	4	파프리카	30
5	배추	14	오이	11	돼지	4	화훼	29
6	시설채소	13	축산	11	딸기	4	토마토	27
7	축산	12	딸기	10	젓소	4	축산	26
8	화훼	12	감자	7	감자	3	딸기	23
9	오이	11	시설채소	6	배	3	오이	22
10	젓소	10	젓소	6	축산	3	시설채소	20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숙식제공 기준 전국 평균 117만 원임. 지역별로 경기도가 12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112만 원으로 가장 낮음. 직업 숙련도에 따라 70~200만 원까지 외국인 고용자의 임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를 동시에 고용하는 경우는 월 150~250만 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3-15. 지역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임금

단위: 만 원/월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전국
외국인근로자 임금	116.3	124.0	117.8	108.7	122.6	112.4	112.3	125.9	112.2	117.4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은 전국 평균 11.7개월이며, 최장 근무 개월수는 23.9개월로 조사됨.

- 지역별로 전북의 고용기간이 평균 17.7개월로 가장 길고, 강원이 7.1개월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됨. 지역 및 농가별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 고용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8년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장 근무 품목 및 축종은 돼지, 소, 닭, 파프리카, 딸기, 배추, 젓소, 화훼, 버섯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3-16. 지역별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기간

단위: 개월

도	외국인 고용	
	평균 개월 수	최장근무 개월 수
강원	7.1	14.2
경기	12.9	29.3
충남	11.4	27.5
충북	12.0	33.1
경남	12.5	28.9
경북	12.4	19.3
전남	10.4	20.4
전북	17.7	25.3
제주	14.3	22.0
전체	11.7	23.9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 설문조사 결과, 농업부문 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은 전국적으로 합법:불법 비율이 79:2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제주도의 합법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고, 경기도가 불법근로자 비율이 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¹

표 3-17.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신분

단위: %

지역	외국인 고용자 신분		
	합법	불법	합계
강원	76	24	100.0
경기	61	39	100.0
충남	78	22	100.0
충북	70	30	100.0
경남	86	14	100.0
경북	84	16	100.0
전남	88	12	100.0
전북	76	24	100.0
제주	91	8	100.0
전국	79	21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2.4. 외국인근로자 수요 급증에도 공급 절대 부족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의한 2010년 외국인근로자 총 34천명 중에서 농축산업 부문 쿼터가 3,100명으로 배정되었으나, 인터넷 신청 3시간도 채 안되어 종료 되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¹ 노동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통계에서는 '06년 이후 비전문취업 사증(E-9) 외국 인력의 불법체류 비율이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8. 2010년 도입쿼터

구 분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 업	계
쿼터량(명)	28,100	1,600	100	3,100	1,100	34,000

자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설문조사 결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하기 어렵다’(29.6%),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22.1%). ‘작업숙련도가 떨어진다’(17.2%), ‘이탈문제’(13.9%)를 들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구인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표 3-19.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의 문제점

단위: 명, %

질문항목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구하기 어렵다	98	29.6	32	9.7	130	19.6
작업숙련도(기술)가 떨어진다	57	17.2	58	17.5	115	17.4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73	22.1	65	19.6	138	20.8
이탈문제	46	13.9	47	14.2	93	14.0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9	2.7	21	6.3	30	4.5
신분의 안정(합법체류기간이 짧음)	29	8.8	56	16.9	85	12.8
임금에 비해 작업능력이 떨어진다	14	4.2	28	8.5	42	6.3
기타	5	1.5	8	2.4	13	2.0
무응답	0	0.0	16	4.8	16	2.4
합계	331	100.0	331	100.0	662	100.0

자료: 전화설문조사 「지역오피니언 리더 조사」

- 특히 농업이 첨단시설원예(유리온실 등), 버섯재배공장, 대규모 축사 등 기업농화 추세에 외국인근로자 상시고용 수요가 증가함에도 농축산업 쿼터가 줄어들어 농기업 확장에 한계 노정
- 향후 한국농업의 첨단농업화전략 달성에 장애요소로 작용(Bottleneck)

- 외국인 근로자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적어 외국인들의 작업장 이동이 잦아지고, 임금인상 요구 등 거래 교섭력이 높아짐.
 - 해고되면 3개월 내에 구직해야 하는 고용조건이 있으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해고 시 구직 위험이 적음.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임금교섭에 유리한 고지 선점.
 - 외국인 고용 노동자의 공급부족 현상은 고용임금 상승 압박을 초래하여 경영비 상승요인으로 작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변화>

- 1991.11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 1993.11월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 2000.4월 연수취업제 시행(연수+취업)
- 2002.11월 취업관리제 시행(일부 서비스업, 국내 연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대상 3년 취업 허용: 특례고용허가제)
- 2003.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2004.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건설업을 취업 허용 업종에 포함)
- 2006년부터 취업 허용 업종을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으로 확대
- 2007.1월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 추가적 산업연수생 도입 중단, 저숙련 외국인력 고용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는 순수한 외국인연수생 제도로 운용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버섯 재배공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 느타리 병버섯 재배사(9개실 * 6,000개), 1일 12,000병(1.5톤 출하)
- 내국인 6명(남 2, 녀 4), 외국인 9명(남 4: 필리핀, 녀 5: 베트남)
- 기숙사 제공, 점식 제공
- 월 120~130만 원 급여(남자 기준이며 여자는 100만 원 남짓). 내국인 남자는 외국인보다 급여가 많으며(140~150만 원), 내국인 여자는 잔업시간이 적어 100만 원 전후로 더 적음)

- 여성인력은 버섯포장, 남성인력은 생산관련작업으로 작업강도 강함.
- 상해보험, 퇴직보험(회사), 체불보증보험(본인)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빠짐. 외국인들은 4대보험보다 오히려 급여를 더 주기를 선호.
- 농축산업, 가사 업종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로 제조업 수준의 1일 8시간 근무, 잔업 근무 시 1.5배 시급 제공
- 한달에 10여 시간 잔업 근무(2~3교대 작업하는 제조업종에서는 보통 기본급여는 더 적지만 잔업시간이 100시간 정도로 많아 월급은 더 많은 편임).

<전북 정읍시 영원면 블루베리 농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 7,500평 블루베리 농장
- 상시고용인력: 외국인 4명(남 2: 베트남, 녀 2: 베트남, 캄보디아)
- 기숙사 제공, 점식 제공
- 월 100만 원 급여(여자 기준). 내국인 여자는 일당 4만 원, 25일 환산 100만 원 (연금 지급 포함 130만 원 정도)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
- 1년전부터 외국인 고용. 1년 전 1명 고용, 그후 친구 권유로 3명 고용
- 마을인력 고용 문제: 노령화, 자기 농사도 짓고 있어 필요할 때 고용하기 어려우며 일을 끌라 다님. 자체 인력조달 조직이 있음. 토, 일요일 작업 안해 불편, 출퇴근시켜야 하는 번거로움. 고령화로 작업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작업속도도 느림.
- 정읍 인력회사 20~30개 정도 있음. 100명 이상 2~3개, 나머지 20~30명 소규모. 일당 8만 원(남자, 규모 적은 곳은 7만 원), 소개비 10%. 80%가 외국인으로 추정(조선족, 우즈벡, 러시아 등 불체자로 추정)

2.5. 희망근로사업의 농촌고용시장 교란 심각

- 2010년 행안부 주관으로 10만 명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벌여 실업문제가 큰 부문의 실직자 생계지원 효과가 있으나, 절대적, 계절적 인력부족 문제가 큰 농축산업 인력시장에서는 인력부족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임금을 상승시키며 모럴헤저드 문제를 확산시켜 부정적 효과가 심각
 - 일례로 전북 김제의 모 포장센터에서는 희망근로인력을 지원받았으나 근로태도 불량으로 기존의 상시고용인들에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생산성도 저해하여 희망근로인력을 받지 않음.
 - 희망근로자의 일당(8시간 근로)이 3만 원이나 농촌지역 쓰레기줍기 등 실제 근로수준이 낮고 투입되는 근로시간도 적어 이들이 과거에는 농사 인력으로 투입되었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농사일을 기피하여 농사인력 부족 심각
 - 농사인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금과 조건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비 상승 압박

표 3-20. 고용인력 구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명, %

보기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1) 공공근로로 인력이 빠져나가서	180	22.5	84	10.5	264	16.5
2) 농촌인구의 고령화	387	48.5	175	21.9	562	35.2
3) 농촌의 인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106	13.3	281	35.2	387	24.2
4) 인근도시 노동자(가용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4	0.5	20	2.5	24	1.5
5) 너무 비싼 임금을 요구해서	21	2.6	110	13.8	131	8.2
6) 기타	5	0.6	5	0.6	10	0.6
무응답	96	12.0	124	15.5	220	13.8
합계	799	100.0	799	100.0	1,598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농촌지역 고용인력 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으로 공공근로로 인한 인력유출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고용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를 순서대로 2가지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로 농촌인구의 고령화(48.5%), 공공근로로 인력이 빠져나가서(22.5%), 농촌의 인력이 계속 줄어들어서(13.3%), 너무 비싼 임금을 요구해서(2.6%)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3. 실태조사에 나타난 지역별 농업부문 노동시장 주요특징

3.1. 경기·강원 및 광역시 지역

- 경기도의 경우, 도시 근교 농업이 발달하여 품목들이 다양함.
 -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 임금도 높을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유입되므로 외국인 이용 수준 높음.
 - 시설채소의 재배 및 낙농축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활용
- 강원도의 경우, 고용노동력을 많이 이용하는 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 정선지역(배추), 춘천지역(토마토), 평창지역(대파)
 - 정식 작업 및 수확기에 많은 고용 노동을 사용하며 5월에 일손이 가장 부족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정선지역에서는 배추, 춘천지역에서는 토마토 및 오이, 평창지역에서는 배추와 감자 생산에 많이 활용
- 광주, 울산, 대전, 대구, 부산 등 광역시에서 농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력이 축산업외의 분야에서도 많이 쓰임.
 - 광주(미나리), 대구(양계), 부산(미나리), 울산(시설채소)

3.2. 경남·경북 지역

- 경상남도의 경우, 거창지역은 딸기와 사과, 진주지역은 고추, 창녕지역은 양파를 생산할 때 고용노동자를 많이 활용
 - 거창지역과 창녕지역은 5월과 6월, 진주지역은 12월에 일손이 가장 부족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거창에서는 축산업에, 창녕에서는 양파재배에 활용
-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지역은 딸기, 봉화지역은 고추, 안동지역은 사과를 생산할 때 고용노동자를 많이 활용
 - 고령지역은 6월과 10월, 봉화지역은 5~6월에서 8~9월, 안동지역은 5월 및 8~10월에 일손 부족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령지역에서 돼지사육에 많이 활용

3.3. 충남·충북 지역

- 충청남도의 경우, 논산시와 홍성군은 딸기를 생산할 때 고용노동자를 많이 활용. 천안시의 경우 산란계, 배, 포도 등 아주 다양한 품목들을 생산하여 전국적으로 연중 내내 농업분야에 대한 고용수요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남.
 - 홍성군은 전체적으로 딸기에 대한 고용노동자 활용이 많으나 외국인 고용자는 주로 돼지사육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활용 측면이 대비됨.
-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시에서 사과, 복숭아, 배를 생산할 때 고용노동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4월, 5월과 10월에 고용수요가 높음.
 - 청주에서는 외국인 고용자들이 축산업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
 - 충주시에서는 외국인 고용자들도 주로 시설채소 재배에 많이 활용

3.4. 전남·전북·제주 지역

- 전라남도의 경우, 신안지역은 대파, 영암지역은 배, 진도지역은 배추, 담양지역은 토마토와 딸기, 무안지역은 양파를 생산할 때 고용노동력을 많이 활용
 - 신안지역은 5월과 11월, 영암지역은 5월과 10월, 진도지역은 12월과 1월, 담양지역은 3월, 무안지역은 6월에 일손 부족
 - 담양에서는 토마토 재배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활용
- 전라북도의 경우, 돼지사육에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쓰임.
- 제주도의 경우, 감귤과 감자를 많이 생산하며 12월과 5월에 고용노동력을 가장 많이 활용. 외국인 노동자는 돼지와 감귤생산에 많이 투입

제4 장

농업인력정책 기본방향 및 세부 방안

1. 농업인력정책의 기본방향

1.1. 농업인력 안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농촌지역, 농축산업 중에서 첨단시설원예, 축산업 등 한국농업의 성장동력 부문에 고용노동력이 농작업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농업인력의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 전제 필요

1.2. 농업인력의 계절성 극복

- 우리 농업의 특징인 고용노동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장기계약이론에서처럼 장기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유익하나, 농업농촌 내부자, 특히 경종작물 종사자 등은 상시고용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러한 한계점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체적인 방안의 예로, 농어촌인력은행 등을 설립해 장기계약형태로 잠

재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1.3.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유입을 위한 노동(경험)기회 제공 확대

- 고용인력모형에서처럼 농업분야 노동경험은 향후 농업분야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농업분야 노동기회 제공을 확대해야 함.
 - 청년들의 취농 유인을 위한 청년 인턴제 실시, 군복무와 관련하여 농업 분야 공익요원 활동, 농관련기업들의 방위산업체 지정 등 청년들의 농업 분야 노동기회 제공 확대 필요

1.4. 농업분야 노동의 효율임금 확보 지원

- 효율성 임금이론에서처럼 높은 임금은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율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농업분야는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임금이 낮은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농업분야의 특정품목 생산은 수익성 증가면에서 제조업처럼 확대되기 어려운 산업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농업분야 고용노동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칭)급여매칭보조’ 방식 도입 필요

1.5. 농촌지역 고용인력 D/B 및 맞춤형 인력알선 시스템 구축

- 농촌지역 고용인력(품앗이, 지역 내 가용고용인력, 시군읍 단위 가용공급인력,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D/B 구축과 맞춤형 인력 알선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및 고용 연결 시스템 구축 필요

- 농어촌의 계절별, 작업단계별, 지역별 고용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전국적, 지역적 공유하는 “농어촌 고용동향 및 전망을 위한 관측사업” 수행 필요
- 현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공급의 절대부족 문제 등에 대해 관련기관(노동부 등)과 협의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촌 인력수급 조정능력 배양 필요

1.6. 농업분야 신규인력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 타산업 인력에 비해 3D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농축산업의 고용 경직성 해소를 위해 희망근로인력, 청년인턴,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등의 안정적 인력 유인을 위한 정부 대응지원 및 공평한 복지제도 시행 필요
 -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농촌고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혜택 지원범위 확대 등 농업부문 고용안정화를 위한 복지정책 관련 정부지원 확대 필요
 - ※ 설문조사 결과, 농업·농촌 노동력부족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1순위) 농촌지역에서의 인력조달시스템 구축(30.2%),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26.8%), 인력고용 보조금지원(19.9%), 농업농촌 전담인력수급회사 설립(19.9%) 등을 들고 있음.
 - 기타 의견으로 농기계 확보로 농민 대여 확대, 농기계 자부담 줄이기, 희망근로 농번기에 피하기, 영농 대행업소 신설, 국내 유희인력 고용, 농촌 홍보 등이 있음.

표 4-1. 농업·농촌 노동력부족 해결을 위한 제안

단위: 명, %

보기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	124	26.8	61	13.2	185	20.0
농촌지역에서의 인력조달 시스템 구축	140	30.2	115	24.8	255	27.5
인력고용 보조금(임금관련)	92	19.9	151	32.6	243	26.2
농업농촌 전담 인력수급회사 설립	92	19.9	65	14.0	157	17.0
기타	15	3.2	18	3.3	33	3.6
무응답	0	0.0	53	11.4	53	5.7
합계	463	100.0	463	100.0	873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2. 세부 추진방안

2.1. 농어촌 인력은행 및 맞춤형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

- 농업의 계절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농어촌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전국의 읍면사무소 또는 협동조합에 인력은행 지사무소 운영
- 각 농가별로 고용인력 수요(상시고용/일고, 남/녀, 내국인/외국인/이주여성, 작업별 소요인력, 기간, 지급 가능급료 등)을 D/B 관리
- 읍면내, 인근 도시, 외국인, 이주여성 등 노동력 공급 가능인력을 D/B화하여 인력수급 관리
 - 노동력 공급 의향 인력은 회원으로 등록, 인력 수요 농가도 회원으로 등록
- 농어촌 인력은행을 운영하되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품목, 지역 맞춤형 인력 공급 추진

- 우리 농업의 계절성 경향이 큰 경종작물의 경우 품목별·지역별로 재배시기가 다르므로 전국인력 배치 시 계절성 문제 완화
- 농작업 특성상 피용자들이 농작업을 3D업종으로 분류하며 회피해 공급의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급여매칭보조’, 직업능력교육 등 지원사업 추진
 - 예컨대, 공공근로·희망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시 급여매칭보조
- 농업부문 취업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인력은행’ 또는 ‘농어업 고용촉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좋을 것 같다(53.3%), 매우 좋은 정책이다(22.9%), 그저 그렇다(12.8%), 좋지 않다(2.5%), 매우 좋지 않다(0.4%) 순서로 나타났다.
 - 좋을 것 같다 이상은 76.2%, 그저 그렇다 12.8%, 좋지 않다 이하가 2.9%임.

표 4-2. 농어촌 인력은행(농어업 고용촉진센터) 운영 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단위: 명, %

보기	빈도수	비중
1) 매우 좋은 정책이다	183	22.9
2) 좋을 것 같다	426	53.3
3) 그저 그렇다	102	12.8
4) 좋지 않다	20	2.5
5) 매우 좋지 않다	3	0.4
무응답	65	8.1
합계	799	100.0

-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은 농어촌 인력은행 또는 농어업 고용촉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과다 행정비용, 인력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처 부족 등에 대한 우려로 기존 민간인력회사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2.2. 농어촌 고용동향 및 전망을 위한 관측사업 수행

- 농어촌의 계절별, 작업단계별, 지역별 고용수급 동향과 전망을 통해 고용정보를 전국적, 지역별로 공유하여 인력수급 안정화 유도
- 농업관측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고용관측팀을 설치하여 노동수급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고용관측사업 수행
- 농어촌 인력은행 및 고용촉진센터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3. 외국인 근로자 농축산업 쿼터 증량과 고용조건 개선

- 농축산업부문이 공장화되고 규모화되는 추세에 지역의 내국인 근로자 조달이 지속 감소추세이며 적기 조달이 어려워 인정적인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급증
 - 공장화 부문: 벼싯 재배, 시설원예
 - 규모화 부문: 축산(양돈, 비육우, 젖소)
- 또한 농축산업, 특히 시설원예 농작업 등은 건설업 등 일반 노무직에 비해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계약 기간을 늘리고 기술훈련 등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3D업종으로 인식되어 고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 제시 중 1순위로 ‘고용기간 늘리기’(32.0%), ‘인력고용 보조금 지원’(19.6%), ‘기술훈련 및 교육’(16.6%), ‘언어교육’(15.4%)을 지적
 - 기타 의견으로 합법고용노동력 이용절차 용이, 외국인 근로자 이용방법 홍보, 이탈방지책 마련 필요, 외국인 근로자 양성,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표 4-3. 농업·농촌부문 외국인 근로자 안정공급 방안

단위: 명, %

방안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고용기간 늘리기	106	32.0	43	13.0	149	22.5
인력고용보조금(임금관련)	65	19.6	85	25.7	150	22.7
기술훈련 및 교육	55	16.6	60	18.1	115	17.4
언어교육	51	15.4	52	15.7	103	15.6
보험 및 산재적용 확대	39	11.8	59	17.8	98	14.8
기타	15	4.5	6	1.8	21	3.2
무응답	0	0.0	26	7.9	26	3.9
합계	331	100.0	331	100.0	662	100.0

자료: 전화 설문조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2.4. 희망근로사업 중단 또는 개선

- 농촌인력시장을 교란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농사일에 배정하되 사업주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근로의 질 제고
 - 공공에서 지급하는 희망근로급여를 줄이고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합산하여(매칭 급여) 실질적인 인력활용 유도
 - 농작업 희망근로 배정자들에 대해 일정기간(2~6개월) 배정(의무)하여 인력의 안정적 활용 도모
- 특히 정식 및 수확기 등 농촌지역 인력수요가 많은 때에는 농촌지역의 희망근로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2.5.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프로그램 확대

-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연계하여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상시 농촌인력으로 활용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촌인력 공급 확대 필요
 - 농번기에는 모내기, 과수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영농활동을, 농한기에는 마을의 낚은회관과 경로당 보수, 무료 빨래와 청소 등을, 장마철이나 겨울 폭설기에는 농수로 및 도로정비, 무너진 축사 및 비닐하우스 복구 등의 작업 지원

<사회봉사명령제 개요>

- 사회봉사명령 제도: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구속 대상이 아닌 경미한 죄질의 교통사고 관련자, 음주사고자, 벌금미납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자
- 사회봉사 대상자 관리: 법무부 산하 전국 54개 보호관찰소
- '10년 사회봉사명령 집행계획:
 - 봉사자 연인원: 연 1,250천 명
 - 1일 근무시간: 8시간(09:00 ~ 18:00, 중식 1시간 제외)
 - 농촌일손돕기, 서민층 집수리 및 도배, 수해복구, 산불 감시 등

-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지원정책에 대해 농업인들의 의견은, 좋을 것 같다(31.2%), 그저 그렇다(23.5%), 아주 좋은 생각이다(16.8%), 좋지 않다(15.6%),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5.4%) 순서로 나타났음.
 - 좋을 것 같다 이상이 48.0%, 그저 그렇다 23.5%, 좋지 않다 이하가 21.0%임.

표 4-4.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촌지원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단위: 명, %

보기	빈도수	백분율
1) 아주 좋은 생각이다	134	16.8
2) 좋을 것 같다	249	31.2
3) 그저 그렇다	188	23.5
4) 좋지 않다	125	15.6
5)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43	5.4
무응답	60	7.5
합계	799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 그러나, 이러한 사회봉사명령 이행 대상자들의 농촌지원정책에 대해 신뢰성 문제와 농작업의 숙련도 부족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농업인들도 있음.
- 그러므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작업훈련 등의 시간도 봉사명령 이행 시간을 반영하는 방안 고려

표 4-5.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촌지원 정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보기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1) 작업숙련도(기술)이 떨어진다는	43	25.6	15	8.9	58	17.3
2) 신뢰하기 어렵다	44	26.2	21	12.5	65	19.3
3) 불성실하다	22	13.1	23	13.7	45	13.4
4) 농촌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32	19.0	38	22.6	70	20.8
5) 효과가 적을 것이다	10	6.0	51	30.4	61	18.2
6) 기타	2	1.2	2	1.2	4	1.2
무응답	15	8.9	18	10.7	33	9.8
합계	168	100.0	168	100.0	336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2.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력네트워크 운영

- 농사에 종사하는 국제이주여성을 제외한 농촌지역 및 농촌인근 도시지역 이주여성을 인력네트워크화하여 농업인력 공급원으로 활용
 - 전북 김제의 유리온실(7,500평)에서는 김제지역 이주여성들 15명을 상시 고용하여 인력문제의 안정적 해결
 - * 노동부에서는 '10.3월 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음식업, 제과, 미용사, 파부미용사, 의류, 공예 등 6개 직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취업알선, 직업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부문은 취업알선 대상에서 제외

<결혼이민자 추이 및 취업 실태>

- 결혼이민자는 증가추세로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필요
 - 결혼이민자 추이: ('07) 126,975명 → ('08) 144,385 → ('09) 167,090명(국적 미 취득자 125,673명, 취득자 41,417명)
 - 결혼이민자가구의 52.9%가 빈곤가구,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 57.5%('05년 보건복지부)
- 결혼이민자의 89.7%가 여성이며, 출신국별로 조선족 32.2%, 중국 29.1%, 베트남 18.4%, 필리핀 5.9% 순임.
- 결혼이민자의 19%만 취업해 있으며, 미취업자의 67%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08년 보건사회연구원)

2.7. 청년들의 취농 유인을 위한 청년인턴제 추진

-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이 농업을 비즈니스로 인식하고 미래농업인력으로 유도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추진

- 1년 정도 계약기간을 정하고 월정 급여를 정하여(130~150만 원, 취농유인을 위해 일반적인 월정급여 110~130만 원에 인센티브 부여) 일정기간 OJT 교육 및 현장실습 후 농업노동취업 알선
 -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농기업, 농작업장의 경우 임금은 정부와 사용자가 공동부담
- 청년인력의 농업부문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청년인턴제 도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은, 바람직하다(41.2%), 그저 그렇다(20.5%), 매우 바람직하다(17.4%), 바람직하지 않다(10.8%), 매우 좋지 않다(1.4%) 순서로 나타났다.
 - 바람직하다 이상은 58.6%, 그저 그렇다 20.5%, 바람직하지 않다 이하가 12.2%임.

표 4-6. 농업부문의 청년인턴제 도입에 대한 농업인 의견

단위: 명, %

보기	빈도수	백분율
1) 매우 바람직하다	139	17.4
2) 바람직하다	329	41.2
3) 그저 그렇다	164	20.5
4) 바람직하지 않다	86	10.8
5) 매우 좋지 않다	11	1.4
무응답	70	8.7
합계	799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 그러나, 청년 인력들은 농촌취업을 기피해, 청년인턴제 도입의 정책적 유효성을 우려하는 농업인들도 있음.

표 4-7. 농업부문의 청년인턴제 도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보기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1) 청년 인력들은 농촌취업을 기피한다	59	60.8	14	14.4	73	37.6
2) 농업분야 고용현장에서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	15	15.5	27	27.8	42	21.7
3) 청년 인력은 임금 외에 요구하는 것이 많다(문화시설 등)	3	3.1	11	11.4	14	7.2
4) 고용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	16	16.5	37	38.2	53	27.3
5) 기타	0	0.0	1	1.0	1	0.5
무응답	4	4.1	7	7.2	11	5.7
합계	97	100.0	97	100.0	194	100.0

자료: 우편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2.8. 농관련기업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 ‘농관련 기업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프로그램은 청년인력의 농업부문 노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향후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과거 노동경험이 향후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이력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임
 - * 위 프로그램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견조사를 위해 제안한 프로그램들임.
- 청년인력의 농업부문 노동기회를 늘리기 위해 군복무와 관련하여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을 농촌부문에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은, 좋을 것 같다(43.8%), 매우 좋은 정책이다(20.4%), 그저 그렇다(15.1%), 좋지 않다(10.8%), 매우 좋지 않다(1.6%) 순서로 나타났음.
 - 좋을 것 같다 이상은 64.2%, 그저 그렇다 15.1%, 좋지 않다 이하가 12.4%임.

표 4-8. 농관련 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보기	빈도수	백분율
1) 매우 좋은 정책이다	163	20.4
2) 좋을 것 같다	350	43.8
3) 그저 그렇다	121	15.1
4) 좋지 않다	86	10.8
5) 매우 좋지 않다	13	1.6
무응답	66	8.3
합계	799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 그러나,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정책에 대해 방위산업체 및 공익요원 대상자의 농업·농촌 부문 적응의 어려움과 다른 군복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농업인들도 있음.
- 그러므로, 대상자의 직업훈련 등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고, 군복무 형평성 문제는 군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

표 4-9.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정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보기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1) 군복무 관련 규정 미비	20	20.2	8	8.1	28	14.2
2) 군복무의 형평성 문제	29	29.3	34	34.4	63	31.8
3) 방위산업체 및 공익요원 대상자의 농업·농촌 부문 적응의 어려움	40	40.4	41	41.4	81	40.9
4) 기타	4	4.0	4	4.0	8	4.0
무응답	6	6.1	12	12.1	18	9.1
합계	99	100.0	99	100.0	198	100.0

자료: 우편 설문조사 「농업인 조사」

2.9. 농촌고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 농촌부문 상시고용인력뿐만 아니라 비정규 농업노동자에 대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보험 적용범위 확대
 - 이를 위해 각 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장 및 보험가입제외 근로자 규정들에 대해 개정 필요

<4대보험의 농림어업 사업장 보험적용 제외 규정>

- 1) 산재보험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2005.1.1시행). 단,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이 가능
 - 가사 서비스업
- 2) 고용보험
 - 농림어업 중 법인 아닌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 가사 서비스업
 - 보험가입 제외 근로자: 65세 이상, 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은 임의가입 가능))
- 3) 국민연금
 -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월 근로시간 80시간 미만)
- 4) 건강보험
 - 농림어업, 건설업, 가사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보험가입 제외자: 1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10. 「농촌고용안정특별교부금」(가칭) 설치

- 농작업 취업여건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구직자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새로

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농촌고용안정 특별교부금」을 설치

- 이를 토대로 기금 조성, 농촌고용사업 실시 지원

○ 사업집행 방식

- 사업 실시를 농기업 등에 위탁
-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신규고용 실업자의 인건비 비율은 위탁비의 1/2 이상
- 노동자와 원칙적으로 1년 고용계약 체결, 필요에 따라 갱신 가능

○ 적용대상사업 사례

- 시설원예, 버섯재배, 축사관리
- 도농교류 추진, 농촌체험 숙박시설, 농가 레스토랑 등
- 수출촉진 컨설팅 등
- 친환경사업단지 등

<일본의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제도>

- 2009년부터 실시
- 자치단체의 중점사업 내용: 지역브랜드 상품개발, 판로개척사업, 여행상품 개발사업, 고령자 대상 자택 배식서비스사업,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 식품 리사이클 사업이나 퇴비의 농업이용촉진 사업 등
- 사업실시 요건 및 정규 고용화를 위한 조건: 사업실시를 민간기업 등에 위탁할 것(지자체 직접 실시는 불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신규고용실업자의 인건비 비율은 위탁비의 1/2 이상, 1년 고용계약체결 원칙, 필요에 따라 갱신 등
- 사업규모: 2,500억 엔(노동보험특별회계)
- 고용창출효과: 3년간 최대 10만 명
- 농업부문 사례: 후쿠오카현(농업법인의 인재확보와 경영개선계획(규모 확대, 신규 품목 도입 등) 실천 사업)

<일본의 농림수산업 고용대책 사례>

- 농업분야 단기고용창출사업
 - 원예산지 단기고용 확보 및 신규진입 촉진사업
 - 도농교류 추진 관련 신규고용창출사업
 - 경작포기지 개선사업
 - 바이오매스 활용 관련 간벌재 등 수입이용체제 정비사업
 - 간벌 및 간벌재 이용촉진사업
 - 선구적 사업연계 및 고용지원사업
 - 수출촉진 컨설팅
 - 중소식품소매업자 산지 공동조달사업
 - 사료용 쌀 생산 및 유통사업 지원
 - 국산조사료 촉진사업
 -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활용 고용창출사업
 - 국산 원자재 공급력강화 대책사업
 - 신토불이 모델타운사업
 - 퇴비 유통·이용촉진지원사업
 - 전업농 경영다각화 및 경영규모 확대 추진사업
 - 농산어촌지역 활력 발굴사업 관련 고용창출
 - 지역농산물 직판장 활용사업
 - 농지재생사업
 -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농가 레스토랑
- (日本 緊急雇用・經濟對策實施本部, 『雇傭對策事業例』, 2009.2)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지역 오피니언 리더, 농업인, 농촌인근 인력회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농업 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음.
-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83.3%에 달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냄(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
- 고용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중이 73%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상시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11%에 그친 반면 일일고용을 이용하는 비중은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농업인 조사).
- 농촌지역 인력회사 인부들의 농작업에 대한 비선호도가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농작업의 어려움(41.9%)과 저임금(17.4%)이 그 주된 이유로 나타남(농촌인근 인력회사 조사).
 - 인력회사를 통한 인부들은 주로 건설작업 현장으로 투입되고, 농업분야는 50~60대 고령층이, 그리고 과거 농작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투입됨.
- 농축산업 고용인력에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인데, 시설원예작업, 축사관리 등 농작업 특성상 주말,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 잔업을 기

피하는 국내 노동력보다 외국인 근로자 선호

- 시설원예, 버섯재배공장 등 상시고용에는 합법 외국인 근로자가 주류이며, 고랭지채소, 양념채소 파종 및 수확기 등에는 지역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됨.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도 상근인력으로 증가추세임.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은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29.6%)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급부족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협상력을 높여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근무태도 불량 등의 도덕적 해이도 유발함.
- '10년도 행안부 주관 희망근로사업으로 농촌지역 농업인력 공급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함.
 - 농촌인근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대부분 기존의 농촌인력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희망근로사업으로 유출됨.
- 농업인력정책에 대한 이론으로는 불완전고용을 주장하는 케인즈학과(신케인즈학과)이론이 완전고용을 주장하는 고전학과(신고전학과)이론보다 더 적합함.
- 임금의 경직성에 대한 신케인즈학파의 미시적 근거 이론들(장기계약이론, 암묵적 고용계약이론, 실업히스테리모형 및 효율성 임금이론)은 농업고용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많음.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선호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선호도(유효함수) 차이로 인해 발생함.
- 농업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향은 농업인력 수급의 현안 문제인 인력수요의 계절성 문제,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비선호 및 유입 부족 문제, 다른 산업분야 대비 상대적 저임금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 설정 필요
- 세부추진방안으로 농어촌인력은행 및 맞춤형 인력공급시스템 구축, 농어촌의 계절별, 작업단계별, 지역별 고용수급동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고용현황 관측사업 수행, 외국인 근로자 농축산업부문 쿼터 증량, 농촌지역 희망근로사업 중단 또는 개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프로그램 확

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력 네트워크 운영, 청년층의 취농유인을 위한 청년인턴제 도입,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농촌고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농촌고용안정 특별교부금 설치 등을 제안함.

2. 결론

- 우리 농업은 인력수급 불일치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연구는 우리 농업 인력수급 실태에 대한 보다 엄밀한 현황분석을 위해 여러 통계자료 분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고용의 계절성, 저임금, 신규인력의 농업부문 회피 및 농업부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증대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농업인력 수급의 특징으로 인해 농업인력 수급의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우리농업(특히, 경종작물)은 지역별 생산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도 지역별 농작업 시기가 달라 전국의 가용한 농업인력을 DB화하고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계절성을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인력은행 및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지역별 시기별 고용인력 현황 및 전망을 나타내는 농업인력관측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농어촌 인력은행 및 인력공급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농업은 산업적 특성상 임금을 제조업 분야처럼 인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 고용에 대한 임금지원을 통해 효율성있는 임금을 실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농업에 대한 신규인력의 유입이 부족한 실정에 대하여, 기존 이론(고용이력 모형)에서 시사하는 대로 농업분야 노동경험 기회를 확대해 향후 취농 유인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청년인턴제,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프로그램

램 확대 등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분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 임금 인상 등 경영비 압박 및 근무태만·이탈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실정이므로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쿼터량을 확대하고,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인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교육지원, 체류기간 연장, 4대보험 지원 등의 복지지원도 필요함.
-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농업부문의 고용인력 수급 불일치가 지속 또는 심화될 경우에는 고용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농촌인력의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 필요

부 록

농업인력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이론적 접근 필요성

- 그간 거시경제학에서 발전되어온 고용 및 실업에 대한 이론적 부분이 농업 분야에 검토된 경우는 거의 없으나, 고용 및 실업에 대한 거시경제학적인 이론 고찰은 농업전반의 인력문제에 대한 거시적 그림을 그려주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노동수요는 기업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화 행위의 일환으로 생산요소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처럼, 농업분야도 적기 영농으로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함.
- 농업분야의 노동력 부족과 고용노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농가들이 많아 정책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보아, 완전고용을 가정하는 신고전학파의 주장보다는 불완전고용(과소고용)을 주장하는 케인즈학파 주장이 농업분야 현실에 더 잘 부합
 - 즉, 농업분야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인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을 통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업분야는 노동자들의 화폐환상(실질임금이 아닌 명목임금, 타산업 또는 다른 기업과의 상대임금, 노동의 계절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농업노동을

- 선호하지 않아 노동 부족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업부문 인력 실태와 연관성이 높은 케인즈학과(신케인즈학과)의 임금 경직성이론의 여러 논거들은 농업부문 인력정책의 방향성 및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나 그간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음.
 - 그러므로, 고용 및 실업이론의 동향을 살펴보고, 농업분야 고용 및 인력수급 실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함.

2. 고용 및 실업이론 동향

- 고용 및 실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거시경제학의 고전학과(신고전학과 포함)와 케인즈학과(신케인즈학과) 간의 논쟁과 함께 발전되어 왔음(김경수·박대근, 2008; Romer, 2006).
- 고전학과(신고전학과 포함) 노동시장이론은 (실질)임금이 충분히 유연하게 반응하는 한, 노동시장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완전고용의 균형에 도달한다는 논리로 노동시장에서 초과노동공급(실업)과 초과노동수요는 실질임금의 조정에 의해 청산(clearing)된다고 주장
 - 마찰실업 등 자발적 실업 외,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균형임금 수준에서는 모든 노동력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박경순·윤여덕, 2006; Friedman, 1968; Romer, 2006).
- 그러나, 케인즈학과는 노동시장이 임금의 경직성(rigidity) 때문에 불완전하게 작동하며, 실업문제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과 생산시장 간의 상호작용인 균형(균형이자율= 균형이윤율) 하에서 간접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
 - 실업은 노동시장에서가 아닌, 이자율에 의해 총수요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 결과 고용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임.

- 또한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실질임금도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노동시장에서는 단체교섭에 의한 명목임금만 결정) 상품시장에서의 가격(물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임. 즉, 명목임금과 가격(물가)의 비율인 실질임금은 경제과정의 결과이지 실업의 원인이 아니며, 실업은 화폐경제 하의 수요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 균형 하에서 생산요소(자본, 노동력)는 그 잠재수준보다 낮게 고용되어 균형상태에서도 더 높은 임금수준과 결합된 더 높은 고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거시정책이 필요함을 주장(김경수·박대근, 2008; 박경순·윤여덕, 2006).
- 특별히, 신케인즈학파는 케인즈학파의 전통적인 주장인 임금의 경직성에 대한 미시적 논거로 장기계약이론, 암묵적 고용계약이론, 실업히스테리모형(고용이력모형), 효율성 임금이론 등을 제시하였음(김준영, 2000).
 - 이러한 신케인즈학파의 주장은 신고전학파에 비해 현실적 정합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김경수·박대근, 2008; 김준영, 2000).

3. 신케인즈학파 이론들의 농업인력정책 시사점

- 신케인즈학파가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임금의 경직성이 고용주인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로 제시한 장기계약이론, 암묵적 고용계약이론, 실업히스테리모형 및 효율성 임금이론은 농업분야 인력조달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줌.
- 장기계약이론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은 장기계약으로 고용노동력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임
 - 상시 계약고용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고수익 시설농업 및 축산농가에 한정
 - 일반 경종분야 등 계절성이 높은 부문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어려움.
- 암묵적 고용계약이론 측면에서, 고용자의 위험선호도가 노동자보다 더 높

아야(덜 위험회피적) 고용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적인 노동자(자가노동비율 70%)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력을 이용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음.

- 더욱이 농업생산은 기후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계획적·전략적으로 고용노동력을 이용하기보다는 임시적·계절적 이용이 많음.
- 실업히스테리(고용이력) 모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자의 과거 고용이력이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규인력이 농업분야에 유입되기 어려울 것임.
 - 인근도시 인력사무소에서 일용노동자를 배치할 때에도 노동자의 과거 이력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건설 등 타분야 노동에 종사하던 인력이 농업농촌분야로 유입되기 어려울 수 있음.
 - 농업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던 인력은 품앗이나 인근 농업인 등 기존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고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음.
- 효율성 임금이론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근무태만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이직으로 질 낮은 인력만 남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풀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은 수익성이 낮은 농업분야에 적용하기 어려움.
 - 다만, 농업분야에 고용된 노동자들(외국인 노동자 포함)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주어지면 농가의 부담은 줄어들고 노동자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효율성 임금이론에서 주장하는 장점들을 농업분야가 누릴 수 있음. 물론 농업분야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임.

4. 농업경영주의 외국인 근로자 선호 이론

- 신고전학과 또는 미시경제학적 노동공급 메카니즘(임금에 따른 노동과 여가의 배분 메카니즘)은 농업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및 국내 노동자의 노동공

- 급 행태 설명에 도움이 됨.
-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에 비해 잔업근무 등 일(야간근무 등)을 더 많이 함.
 -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노동자의 각 효용함수[내국인 $U_d(C, N)$, 외국인 $U_f(C, N)$; U_d, U_f 는 내국인 및 외국인 효용함수, C 는 노동으로 번 임금으로 행한 소비, N 은 여가시간]에서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서로 다름(효용함수가 다름).
 - 실질임금 변화에 따른 노동과 여가의 대체효과 및 소득효과에서, 내국인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를 선호하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여가 보다는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자 노동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함.
 - 그러므로, 실질임금의 변화(증가)가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는 여가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및 노동에 대한 비효용(disutility)이 상대적으로 작은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남.
 - 물론,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현장문제(이탈 및 임금교섭협상요구 등)는 신케인즈학파가 임금의 경직성 논리로 제시한 장기계약이론, 암묵적 고용계약이론, 실업히스테리 모형, 효율성 임금이론 그리고 가격 경직성의 설명 논리인 메뉴비용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즉, 장기계약을 위한 제도개선, 암묵적 고용계약과 관련 고용자의 위험회피 방안, 실업히스테리 모형과 관련한 고용이력 활용방안, 효율성 임금과 관련하여 농업분야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메뉴비용을 줄이는 방안 강구 등 필요

5.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이론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급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이 노동자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임.

-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농업분야 배치정책인 쿼터 할당량(현재 2000명) 증가 필요
- 외국인 노동력의 초과수요 또는 과소공급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이고, 근무태만 및 잦은 이직·이탈 등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 가능
- 더욱이, 농업은 산업적 특수성(물가관리를 위한 농산물가격에 대한 정부조치 등)으로 인해, 임금을 타산업처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을 수 있는 타산업분야를 더 선호하게 되어 농업부문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임.

6. 농어촌 공동체회사 이론

- 고용의 지역·사회·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유럽의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 측면에서 농업·농촌분야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
- 지역적으로 주어진 조건에 가장 적절한 경쟁자원(숙련, 서비스, 하부구조)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쉽 접근 등 지역에 기초한 경제(지역기반경제)의 현대화 장점을 활용
- 실천방안으로 ‘생산적 복지’와 연계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유럽의 새로운 고용정책 패러다임
- 농업농촌분야의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적 접근 방법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 농업농촌부문 임금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처럼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케인즈학과 경제학처럼 불완전고용(과소고용) 상태이므로 정부정책(재정지출 포함)을 통해 총수요를 늘려 고용창출을 하도록 노동수요 확대 필요

- 이러한 방안은 고용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및 의료·복지 서비스 증대 등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 부여

- * 장기계약이론: 임금에 대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보비용, 협상비용, 메뉴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쌍방이 모두 유리하게 되므로 임금이 경직되거나 느리게 조정된다는 이론.
- * 암묵적 고용계약이론: 노동자와 기업가간에 고용계약이 공식적인 법적 계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쌍방간의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동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함. 이 이론은 노동자들이 불확실한 임금을 받는 것을 꺼릴 경우에 오히려 안정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최적행위(효용극대화)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임금의 경직성 현상 발생을 설명함.
- * 실업히스테리모형(고용이력모형): 고용 및 신규 일자리를 찾는데 있어서 그 노동자가 현재 직장에 몸담고 있는지, 실직상태에 있는지 등 이력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단기 뿐 아니라 장기에서도 충수요가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의 이력행위(hysteresis)를 설명. 예) 노동조합 회원자격 유지 여부(insiders vs. outsiders)가 임금결정에 영향.
- * 효율성임금모델: 효율성임금수준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생산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설령 노동시장에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임금을 더 낮게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 즉, 효율성임금은 임금 인하가 임금 지불비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기업의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둠. 예) 높은 임금은 이직율을 낮추고, 노동의 질을 유지하고(질 높은 노동 유지), 도덕적 해이를 줄여 기업의 이윤에 도움.
- * 메뉴비용: 가격을 새로이 조정할 경우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가격책자, 카탈로그, 메뉴판 발간 등 제반비용이 드는데 이러한 가격조정비용을 통칭
- *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 이론: 신고전경제학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개념(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을 통합한 공동체주의적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교육, 직업훈련, 공공 인프라 영역에서 능동적인 국가 활동의 필요성 강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지역 오피니언 리더 조사표>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 ☎02-3299-4349

「농업·농촌 고용실태와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 즈음하여

현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농사일에도 연구원의 조사업무에 변함 없이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농업·농촌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노동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정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신 후에 **2010년 5월 3일(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fax(02-962-7312)나 이메일(fsyoon76@kre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REI 리포터 및 당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지역모니터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4월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오 세 익

조사관련 문의: 미래정책연구실(전익수 02-3299-4349, 윤종열 02-3299-4257)

통신원번호

--	--	--	--	--

(봉투에 기재된 통신원번호 다섯자리 기재)

■ **지역별 고용노동력 수요**

문 1)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인들은 고용노동력을 어떤 품목에 가장 많이 이용합니까?

(품목1: , 품목2: , 품목3:)

예) 양파, 배, 돼지

문 2)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에서 고용노동력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월별)

(시기1: 월, (시기2 월), (시기3 월)

예) 4월, 5월, 10월

문 3)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인들은 어떤 농작업에 고용노동력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까?(순서대로 3개)

(품목 , 농작업)

(품목 , 농작업)

(품목 , 농작업)

예) (품목: 대파, 농작업: 정식(아주심기))

■ 지역별 고용노동력 조달방법

문 4)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인들은 필요한 고용노동력을 주로 어떻게 조달합니까?

① 품앗이 ② 인력수급회사(인근 도시) ③ 다른 동네 ④ 기타 ()

문 4-1) 위의 방법(①,②,③,④) 중, **논/밭 농사**의 경우 고용노동력 조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문 4-2) 위의 방법(①,②,③,④) 중, **과수 농사**의 경우 고용노동력 조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문 4-3) 위의 방법(①,②,③,④) 중, **축산관련** 고용노동력 조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문 5) 귀하가 속한 지역의 고용노동력은 주로 어떤 분야에 고용되고 있습니까?

예) 건설분야, 산업공단 등

문 5-1)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 고용노동력 임금과 해당지역 산업고용 임금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농업고용 노동자 원/일), (산업고용 노동자 원/일 혹은 원/월)

예) 농업고용 노동자 35,000원/일, 건설노동자 50,000원/일

문 6) 귀하가 속한 지역의 인력알선소(직업소개소 등)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지역별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 실태

문 7)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에 외국인 고용은 어떤 품목(또는 축종)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3개 정도)

예) 돼지, 닭, 시설딸기

문 7-1)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자들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합법과 불법의 비율)
합법 : 불법 = 7 : 3

문 7-1)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자들의 임금은 어떠합니까?
예) 월 120만 원(숙식 제공)

문 7-2)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자들은 얼마나 오래 근무를 합니까?
예) 평균 6개월(돼지 키우는 곳에서는 약 10개월)

문 7-3)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 ① 구하기 어렵다
- ② 작업숙련도(기술)가 떨어진다
- ③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 ④ 이탈문제
- ⑤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 ⑥ 신분의 안정성(합법체류기간이 짧음)
- ⑦ 임금에 비해 작업능력이 떨어진다
- ⑧ 기타()

문 7-4) 농업·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 ① 고용기간 늘리기 ② 언어교육
- ③ 기술훈련 및 교육 ④ 보험 및 산재적용 확대 ⑤ 인력고용보조금(임금관련)
- ⑥ 기타()

문 8) 귀하가 속한 지역의 다문화가정(배우자 중의 한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 농업·농촌 인력조달에 대한 요구

문 9)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 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 ② 지역마다 농업농촌 전담 인력수급회사 설립
③ 농촌지역에서의 인력조달 시스템 구축 ④ 인력고용 보조금(임금 관련)
⑤ 너무 비싼 임금을 요구해서 ⑥ 기타()

문 10) 귀하가 속한 지역의 농업분야 노동력 부족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등
귀하의 의견 및 건의하실 내용을 적어주세요.

www.krei.re.kr <농업인 조사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02-3299-4349)

「농업·농촌 고용실태와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 즈음하여

현지통신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농사일에도 연구원의 조사업무에 변함 없이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농정연구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신 후에 **2010년 6월 23일(수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내용은 연구에만 이용되고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당연구원 현지통신원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5월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오 세 익

조사관련 문의: 미래정책연구실(전익수 02-3299-4349, 윤종열 02-3299-4257)

통신원번호

--	--	--	--	--

(봉투에 기재된 통신원 번호 다섯자리 기재)

I. 일반 사항

문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대 이상

문 2) 연평균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③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④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 ⑤ 4천만 원~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 (※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이전소득)

문 3) 연평균 **농업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 ③ 2천만 원~3천만 원 미만
 ④ 3천만 원~4천만 원 미만 ⑤ 4천만 원~5천만 원 미만 ⑥ 5천만 원~1억 원 미만
 ⑦ 1억 원 이상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경영비)

문 4) 농사 이외 **부업 또는 취업**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없는 경우 ×표시)

본 인: 부업(취업)종류 _____ (연간 종사일 수 _____)

배우자: 부업(취업)종류 _____ (연간 종사일 수 _____)

문 5) **재배 및 생산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소유 및 임차한 농지는 포함하되 임대농지는 제외)

구분		재배 및 생산 규모
축산	논	평
	밭	평
	과수	평
	소	두수
축산	돼지	두수
	닭	수수
	기타()	두수

※ II. 공통사항은 모두 응답해 주시고,

다음 III~VI은 귀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기록해 주세요.

구분	조사항목
공통사항	⇒ II. 공통사항 (3페이지로)
벼농사	⇒ III. 벼농사 (7페이지로)
밭농사	⇒ IV. 밭농사 (7페이지로)
과수농사	⇒ V. 과수농사 (8페이지로)
축산업	⇒ VI. 축산업 (8페이지로)

■ 안내문

○ 조사 사례비를 계좌입금 받기 원하시는 분 중 아직까지 계좌번호를 보내주지 않으신 분은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_____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Ⅱ . 공통사항(모두 응답 부탁드립니다.)

문 1)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고용노동력의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문 2) 귀 닥의 농사에 상시 고용(계속 고용)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문 2-1) (문 2에서 ‘① 있다’에 답하신 분만) 상시고용 인력은 몇 명이고, 고용기간은 어떠한가요?

상시고용 노동력	사람수	고용기간	월 임금(만원)	기타
내국인(남/여)	(남: 명/여: 명)	개 월	남: , 여:	
외국인(남/여)	(남: 명/여: 명)	개 월	남: , 여:	출산국개()

문 3) 귀 닥의 농사에 일고(하루씩 고용)를 이용하십니까? ()

- ① 이용한다 ② 이용하지 않는다

문 3-1) (문 3에서 ①에 답하신 분만) 일고는 어떤 농사의 무슨 작업에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까?

일용직 노동자	농사 종류	농작업		고용기간
내국인(남/여)		(남: 작업 /여: 작업)		일
외국인(남/여)		(남: 작업 /여: 작업)		일

주: 농사의 종류는 벼농사, 밭농사(양파 등 구체적인 작물), 과수농사(사과 등 구체적인 작물), 축산업(돼지 등 구체적인 축종) 중 선택

문 3-2) (문 3에서 ①에 답하신 분만) 일고의 1일 임금은 얼마입니까?

일용직 노동자	1인당 1일 임금		기타
내국인(남/여)	(남: 원/여: 원)		
외국인(남/여)	(남: 원/여: 원)		

주: 연간 변동 및 임금 격차 등 특별사항이 있으면 기타란에 기재(예, 정식기 및 수확기 남 10만 원/여 8만 원)

문 4) 귀택의 농사에 이용하는 **상시고용 인력**은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보기에서 2개 선택)

상시고용 노동력	1순위/2순위	보기
내국인	(1순위: /2순위:)	① 같은 동네/이웃 동네 ② 인력회사(인근도시) ③ 전문 작업단 ④ 기타 ()
외국인	(1순위: /2순위:)	① 노동부 고용촉진센터 ② 인력회사(인근도시) ③ 전문 작업단 ④ 이주여성근로자(다문화가정) ⑤기타 ()

주: 전문작업단은 개별적인 팀을 구성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

문 5) 귀택의 농사에 이용하는 **일고**는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보기에서 2개 선택)

일용직 고용 노동력	1순위/2순위	보기
국내인	(1순위: /2순위:)	① 품앗이 ② 같은 동네/이웃동네(임금고용) ③ 인력회사(인근도시) ④ 전문 작업단 ⑤ 기타 ()
외국인	(1순위: /2순위:)	① 노동부 고용촉진센터 ② 인력회사(인근도시) ③ 전문 작업단 ④ 이주여성근로자(다문화가정) ⑤기타 ()

주: 전문작업단은 개별적인 팀을 구성하여 농작업에 투입되는 작업단

문 6) 귀하께서 고용한 **내국인 인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문 6-1) (6번문항에서 ④, ⑤번 답하신 분) **내국인 인력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작업숙련도(기술)가 떨어진다 ②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③ 나이가 너무 많다 ④ 불성실하다
⑤ 임금에 비해 작업능력이 떨어진다 ⑥ 기타()

문 7) 귀하께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문 8)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구하기 어렵다 ② 작업숙련도(기술)가 떨어진다 ③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④ 이탈문제 ⑤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⑥ 신분의 안정성(합법체류기간이 짧음)
⑦ 임금에 비해 작업능력이 떨어진다 ⑧ 기타()

문 9) 노동력(인력) 부족 때문에 **적기영농**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문 9-1) (문 9에서 ①, ②번에 답하신 분만) 인력 때문에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무슨 농작업입니까? (고용 인력이 가장 필요한 품목 및 농작업 기재)

° 벼농사 관련

품 목: _____ 수도작 _____
농작업: _____

° 밭농사 관련

품 목: _____
농작업: _____

° 과수농사 관련

품 목: _____
농작업: _____

° 축산 관련

품 목: _____
농작업: _____

문 10) **고용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공공근로로 인력이 빠져나가서 ② 농촌인구의 고령화
③ 농촌의 인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④ 인근도시 노동자(가용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⑤ 너무 비싼 임금을 요구해서 ⑥ 기타()

문 11) **품앗이**(같은 동네 또는 인근동네)로 인력을 고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사람이 없다 ② 작업이 달라서 불편하다 ③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④ 기피한다
⑤ 기타()

문 12) 인근 도시의 **인력회사**를 통해 인력을 고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너무 비싸다 ② 인력회사에 대한 정보 부족 ③ 사람이 없다 ④ 고령화
⑤ 기술 숙련도가 낮다 ⑥ 기타()

문 13) **전문작업단**을 통해 인력을 고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너무 비싸다 ② 전문작업단에 대한 정보 부족 ③ 구성원들이 불법체류 외국노동자
④ 전문작업단의 부족(사람부족) ⑤ 기술 숙련도가 낮다 ⑥ 기타()

문 14)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 ② 지역마다 농업농촌 전담 인력수급회사 설립
③ 농촌지역에서의 인력조달시스템 구축 ④ 인력고용보조금(임금관련)
⑤ 너무 비싼 임금을 요구해서 ⑥ 기타()

문 15) 농업·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고용기간 늘리기 ② 언어교육 ③ 기술훈련 및 교육
④ 보험 및 산재적용 확대 ⑤ 인력고용보조금(임금관련)
⑥ 노동부에서 할당하는 농업부문 외국인노동자 인원 확대 ⑦ 기타()

문 16)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촌지원에 투입' 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아주 좋은 생각이다 ② 좋을 것 같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좋지 않다 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프로그램은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연계하여 농번기에는 모내기, 과수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활동을, 농한기에는 낫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보수, 무료 빨래와 청소 등을, 장마철이나 겨울 폭설기에는 농수로 및 도로정비, 무너진 축사 및 비닐하우스 복구 등의 작업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 16-1) (문 16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좋지 않거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작업숙련도(기술)가 떨어진다 ② 신뢰하기 어렵다
③ 불성실하다 ④ 농촌이미지에 맞지 않다
⑤ 효과가 적을 것이다 ⑥ 기타()

문 17) 청년인력의 농업부문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인턴제를 도입' 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바람직하지 않다 ⑤ 매우 좋지 않다

※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은 실업율이 높은 청년들의 농업부문 취업유인을 위해 일반적 인 월정금액(110~130만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후 농업노동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인턴의 임금은 이들을 고용하는 농기업 및 농작업장과 정부가 공공부담

문 17-1) (문 17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청년인력들은 농촌취업을 기피한다
- ② 농업분야 고용현장에서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
- ③ 청년인력은 임금외에 요구하는 것이 많다(문화시설 등)
- ④ 고용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
- ⑤ 기타()

문 18) 청년인력의 농업부문 노동기회를 늘리기 위해 **군복무와 관련하여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에 활용’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은 정책이다 ② 좋을 것 같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좋지 않다

※ 농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 프로그램은 청년 인력에 농업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그램
* 위 프로그램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견조사를 위해 제안한 프로그램들임.

문 18-1) (문 18에서 ④, ⑤번에 답하신 분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1순위() 2순위()

- ① 군복무 관련 규정 미비
- ② 군복무의 형평성 문제(기존의 방위산업체 업무 및 공익요원들의 업무 비교시)
- ③ 방위산업체 및 공익요원 대상자의 농업 농촌 부문 적응의 어려움(공익요원 대상자의 신체적 약점 등)
- ④ 기타 ()

문 19) 농업부문 취업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인력은행’ 또는 ‘농어업 고용촉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은 정책이다 ② 좋을 것 같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좋지 않다

※ 농어촌 인력은행 및 농어업 고용촉진센터 프로그램은 농어업·농어촌 분야 구인·구직자간 직종·시기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직종 및 시기별 인력수요 조사, 인력공급 가능자 정보 등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 및 훈련 알선, 영농근로자 인증서 발급 등 공공성 있는 인력중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 예시 >						
고용노동력 출처	발농사 주요작물	농작업 단계				
		파종전	파종 및 정식	생육기	수확기	수확후
같은 동네/이웃동네 (품앗이)	양 파		✓		✓	
인력수급회사 (인근 도시)	배 추		✓	✓	✓	
예) ‘품앗이’의 경우, 양파농사(품목)의 파종 및 정식, 수확기 농작업에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종 및 정식과 수확기에 √표 하기						

고용노동력 출처	발농사 주요작물	농작업 단계				
		파종전	파종 및 정식	생육기	수확기	수확후
같은 동네/이웃동네 (품앗이)						
같은 동네/이웃동네 (유료인력)						
인력수급회사 (인근 도시)						
전문작업단						
기타						

예) ‘품앗이’의 경우, 양파농사(품목)의 파종 및 정식, 수확기 농작업에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종 및 정식과 수확기에 √표 하기

V. 과수 농사를 하시는 경우

문 22) 귀댁의 과수농사에 고용하는 일용 노동자의 고용 출처별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고용 출처별로 이용하시는 과수농사 주요품목을 적어주시고, 해당 농작업에 √표 해 주세요.

고용노동력 출처	과수농사 주요품목	농작업 단계			
		휴면·발아 개화기	생장비대기	수확기	수확후
같은 동네/이웃동네 (품앗이)					
같은 동네/이웃동네 (유료인력)					
인력수급회사 (인근 도시)					
전문작업단					
기타					

주: 휴면·발아 개화기는 인공수정 전까지 작업시기, 생장비대기는 인공수정에서 수확 전까지 작업시기임.

예) ‘품앗이’의 경우, 사과농사(품목)의 생장 비대기와 수확기 농작업에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생장 비대기, 수확기에 √표 하기

Ⅵ. 축산업을 하시는 경우

문 23) 귀댁의 축산업에 고용하는 **일용 노동자의 고용 출처별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고용 출처별로 이용하시는 축종을 적어주시고, 해당 농작업에 √표 해 주세요.

고용노동력 출처	축종	농작업 단계		
		육성기	번식·착유·채란기	출하기
같은 동네/아웃 동네 (품앗이)				
같은 동네/아웃 동네 (유료인력)				
인력수급회사 (인근 도시)				
전문작업단				
기타				

주: 육성기는 사료 조제급여, 방역 및 치료, 손질 및 관리작업, 번식·착유·채란기는 분만 관리, 착유 및 우유처리, 채란관리작업, 출하기는 축사청소/분뇨처리, 방목, 구입 및 판매, 기타작업
예) ‘품앗이’의 경우, 돼지의 출하기에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축종(돼지), 출하기에 √표 하기.

<끝까지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인력회사 조사표>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02-3299-4349)

「농업·농촌 고용실태와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사에 즈음하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농업·농촌 고용실태와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인력회사는 농업·농촌 인력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농업·농촌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회사 운영시 발생하는 많은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내용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본 조사의 취지를 헤아려주셔서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조사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회사의 무궁한 번영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6월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오 세 익

조사관련 문의: 미래정책연구실(전익수 02-3299-4349, 윤종열 02-3299-4257)

I. 일반 사항

문 1)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도), (시·군), (동·읍·면) 업체명: ()

Ⅱ. 설문 내용

문 1) 회사와 인근 농촌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단, 차량 이동시)

-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③ 1시간~1시간 30분 ④ 1시간 30분 이상

문 2) 회사에서는 작업반을 운영합니까?(작업반이란 작업반장의 관리하에 10명 미만의 인력을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팀을 말함.)

- ① 예 ② 아니오

문 3) 귀 회사를 통해 직업을 소개받는 인력 중 외국인도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4) 위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하신 경우 외국인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력 중 외국인 비율: (%)

문 5)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주로 어떤 작업 현장으로 투입됩니까?

- ① 철거, 건설현장 등 일용직 인부 ② 주변 농촌의 농작업
③ 경비, 공장 생산직 등 기간제 비정규직 인력 ④ 기타()

문 6)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대체로 어떤 일을 선호하는 편입니까?

- ① 철거, 건설현장 ② 주변 농촌의 농작업 ③ 경비, 공장 생산직 등 기간제 비정규직
취업 ④ 기타()

문 7) 위 문항에서 그런일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임금이 높아서 ② 일이 쉬워서 ③ 작업 여건이 좋아서 ④ 기타()

문 8) 귀 인력회사에서 소개하는 인력들이 농작업(일)을 얼마나 선호합니까?

- ① 아주 선호한다 ② 선호하는 편이다 ③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④ 아주 선호하지 않는다

문 9) 위 문항에서 ③ 또는 ④를 응답한 경우, 농촌의 농작업을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농작업)이 어려워서 ② 임금이 적어서 ③ 거리가 너무 멀어서(운송 수단이 없
어서) ④ 고용이 너무 한시적이어서 ⑤ 기타()

문 10) 회사에서 관리하는 전체 인원 중 주변 농촌 또는 농가로 투입되는 인력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구분	전체 인원	농촌 또는 농가 투입 인원
인원	명	명

문 11) 농촌지역 또는 농가로 인력을 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작성: 1순위(), 2순위()

- ① 국적 ② 성별 ③ 나이 ④ 인부의 의사 ⑤ 인부의 작업 능력
⑥ 일당 및 중개수수료에 따라 ⑦ 고용주의 요구조건 ⑧ 기타()

문 12)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력 중 농촌지역 또는 농가에 주로 어떤 인력이 투입됩니까?

순서대로 작성: 1순위(), 2순위()

- ① 내국인 남성 30~40대 ② 내국인 남성 50대 ③ 내국인 남성 60대 이상
④ 내국인 여성 30~40대 ⑤ 내국인 여성 50대 ⑥ 내국인 여성 60대 이상
⑦ 외국인 남성 ⑧ 외국인 여성

문 13) 농촌지역 또는 농가로부터 인력 소개 요청이 가장 많은 시기는 언제 입니까?

- ① 봄철(3월~6월) ② 여름철(7월~8월) ③ 가을철(9월~10월) ④ 겨울철(11월~익년 2월)

문 14) 농촌지역 또는 농가로부터 인력 소개 요청은 최근 어떻습니까?(작년과 비교하여)

- ① 늘었다 ② 비슷하다 ③ 줄었다

문 15) 회사에서는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합니까?

- ① 인터넷, 신문, 잡지 광고 ② 전단지 및 벽보 홍보 ③ 인부의 소개 및 추천
④ 기타()

문 16) 인력회사를 운영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인력의 이탈 및 조달 등 인력 관리 ② 인근 인력회사와의 경쟁
③ 중개수수료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④ 세금 및 법률 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부재
⑤ 불법채류 노동자 단속의 항시 노출 ⑥ 시기별·계절별 인력 수요 불균형
⑦ 기타()

<끝까지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경상북도. 2010. “경상북도 「도농인력 I-BANK」 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서” (경상북도 내부자료).
- 고용전략회의. 2010.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보도자료).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3937>.
- 김경수, 박대근. 2008. 거시경제학(제3판). 박영사.
- 김준영. 2000. 거시경제학. 박영사.
- 김철민, 이명기, 한호석. 2008. 「농림수산물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홍식, 박구원. 2007. “경기도 관광산업 고용실태 및 고용창출효과분석.” 「관광연구」. 제22권 제1호 pp. 461-486.
- 농림수산물식품부. 2009.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인재개발원. 2009. 귀농귀촌 희망을 노래하다. 귀농귀촌 종합안내서.
- 박경수, 윤여덕. 2006. “독일의 고용정책 비판과 대안: 포스트케인즈주의 시각에서.” 한국사회학회 40: 77-118.
- 박성재 외. 2010. 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영구, 이승렬. 2006. “한국 농촌지역의 고용기회요인과 정책시사점.” 한국정책학회 15: 87-110.
- 박재운, 김호범. 2010. “한국 물류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변화추이 분석.” 「물류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103-129.
-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론집」. 제13권 pp.131-158.
- 설동훈. 2006.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 「한국인구의 성장과 다양성」.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pp.334-363.
- 성백남, 정갑영. 1992. 「섬유산업의 인력수급전망과 대응: 한국 섬유산업의 인력 수급전망」.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윤진호. 2001. “한국 건설업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경제발전연구」. 제7권 제1호 pp. 91-124.
- 이성우, 임형백, 고금석. 2003. “기회편익으로 측정한 도농간 이동자의 고용기회.” 「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pp. 1-26.

- 이성우, 임형백, 조중구. 2003.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결정요인, 1995~2000.” 『농촌경제』, 제26권 제1호.
- 이정환외. 1986. 「농업부문 장기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종구 외. 2005.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방안연구: 외국인력 도입 및 사회관리 대행기관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법무부.
- 임현진,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한국사회과학』, 제22권 pp. 153-186.
- 정도영, 장지용, 박재운. 2010.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한국 농림어업의 고용구조와 고용유발효과 변화추이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pp. 249-280.
- 정명채, 신영정, 이영대. 1997. 「농림부문 해외인력 활용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외. 2009.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1/5 차 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00. 농업총조사 2000. http://kosis.kr/nsportal/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F.
- 통계청. 2005. 농업총조사 2005. http://kosis.kr/nsportal/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F.
- 허재준. 2003. “자유무역협정, 노동기준, 노동시장”. 『응용경제』, 제5권 제2호 pp. 41-71.
- Akerlof, George A., and Main, Brian G. M. 1981. “An Experience-Weighted Measure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Dur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71 (December): 1003-1011.
- Akerlof, George A., and Yellen, Janet L. 1985. “A Near-Rational Model of the Business Cycle, with Wage and Price Inerti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0 (Supplement): 823-838. Reprinted in Mankiw and Romer(1991).
- Akerlof, George A., and Yellen, Janet L. 1990. “The Fair Wage-Effort Hypothesis and Un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 (May): 255-283.
- Azariadis, Costas. 1975. “Implicit Contracts and Underemployment Equilibri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December): 1183-1202.
- Baily, Martin Neil. 1974. “Wages and Employment under Uncertain Demand.” *Review of Economic Studies* 41 (January): 37-50.
- Barro, Robert J. 1977. “Long-Term Contracting, Sticky Prices, and Monetary Polic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 (July): 305-316.
- Blanchard, Olivier J., and Summers, Lawrence, H. 1986.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NBER Macroeconomics Annual* 1: 15-78.
- Chang, C., Sorrentino, C., 1991. “Union membership in statistics in 12 countries.” *Monthly Labor Review*, 46-53.
- Friedman, Milton 1968. “The Role of Monetary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58

(March):1-7.

- Gottfries, Nils. 1992. "Insiders, Outsiders, and Nominal Wage Contrac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April): 252-270.
- Hall, Robert E. 1978. "Employment Fluctuations and Wage Rigidit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1, 91-123.
- Hall, Robert E. 1982. "The Importance of Lifetime Jobs in the U.S.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72 (September): 716-724.
- Leontief, Wassily. 1946. "The Pure Theory of the Guaranteed Annual Wage Contrac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4 (February): 76-79.
- Lindbeck, A. and D.J. Snower, 1990. "Cooperation, harassment, and involuntary unemployment: Reply." *American Economic Review* 80: 631-636.
- Mankiw, N. Gregory. 1985. "Small Menu Costs and Large Business Cycles: A Macroeconomic Model of Monopol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0 (May): 529-539. Reprinted in Mankiw and Romer(1991).
- Oswald, Andrew J. 1993. "Efficient Contracts Are on the Labour Demand Curve: Theory and Facts." *Labour Economics* 1 (June): 85-113.
- Romer, David. 2006. *Advanced Macro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Third edition; (번역) 안국신, 유진방, 2010. Romer 거시경제학.
- Shapiro, Carl, and Stiglitz, Joseph E. 1984. "Equilibrium Unemployment as a Worker Discipline De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74(June): 433-444. Reprinted in Mankiw and Romer(1991).
- Weiss, Andrew. 1980. "Job Queues and Layoffs in Labor Markets with Flexible Wag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June): 526-538.

정책연구보고 M106

농어촌 고용실태와 인력정책 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8.

발 행 2010. 8.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문원사

전화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ISBN 978-89-6013-168-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